

토론회

통합진보당 사태와 노동자 정치운동의 진로 자료집

일시: 2012년 6월 1일(금)~2일(토)

장소: 전태일 노동대학 마음수련원

글 실는 순서

일정표	4쪽
-----	----

[자료]

[발제문]

통합진보당 사태와 진보정치운동의 진로	5쪽
----------------------	----

[참고 자료]

[일시별 경과 보고]	19쪽
-------------	-----

[주제별 자료]	24쪽
----------	-----

[노래]

인터내셔널가	77쪽
--------	-----

[일정표]

시 간	일 정 내 용
6월 1일(금)	
22:00~22:10	집결, 접수
22:10~22:20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22:20~22:40	인사말 및 참가자 소개(지역별·산업별·단체별)
22:40~23:00	1주제 “통합진보당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원인과 입장” 발제
23:00~24:00	질의응답 및 토의
6월 2일(토)	
00:00~00:10	휴식
00:10~00:30	2주제 “노동자 정치운동의 진로 : 쟁점을 중심으로” 발제
00:30~01:30	질의응답 및 토의
01:30~01:40	휴식
01:40~02:40	종합토의(지역·산업별·단체별 정치운동 동향과 결의)
02:40~03:00	뒤풀이

[발제문]

통합진보당 사태와 진보정치운동의 진로

김승호(전태일 노동대학 대표)

1. 통합진보당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원인과 입장

1) 통진당 사태란?

통진당 사태란 무엇인가?

4.11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비례대표 내부경선 부정선거 시비(진상조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부정선거’ 규정과 그에 맞서 부정선거임을 부정하는 당권파의 공청회)와 그와 관련하여 빚어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를 둘러싼 갈등과, 그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 문제로 빚어진 회의의 파행(전국운영위원회에 대한 당권파의 물리적 저지와 비당권파들만의 전자회의, 그리고 비당권파만으로 진행된 중앙위원회)과 폭력사태, 그 이후 전자회의에 의한 비당권파의 혁신비대위의 구성과 그에 맞선 당권파의 당원비대위 구성으로 ‘한 지붕 두 가정’을 이룬 극한적 대립과 사실상의 분당 상태 등 ‘통진당의 위기’이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통진당 사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러한 통진당 내부의 갈등 전개를 매개로 하여 남한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진보운동권에서, 노동운동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과, 이 통진당 밖의 권역들이 통진당에 대하여 가하고 있는 상황들(그 안에는 정치검찰의 통진당 수사와 압수 수색도 포함된다.)이 모두 통진당 사태에 포괄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요약하여 언론에서는 ‘진보의 위기’ 또는 ‘진보정치의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진보정치세력이 이 통진당 내부갈등으로 그 부도덕성, 비민주성, 폭력성, 친북 편향성 등을 드러냄으로 인해 국민대중으로부터 심하게 고립되고 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갈래로 사분오열됨으로 인해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급격히 상실하게 된 사태라는 것이다.¹⁾

한데, 통진당 사태의 핵심을 이렇게 ‘진보의 위기’에 두고자 하는 의견 가운데는 “수구보수 세력이 민중 자주통일 세력을 마녀사냥하고 고립·압살시키고 있는 사태”라는 식의 시각도 있다.²⁾ 그러나 지금 그

1) 본 자료집 24쪽, ‘경향신문-진보정치의 위기’ 참조.

2) 본 자료집 32쪽 ‘한호석-신당권파 출현과 그 이후’, 36쪽 ‘한호석-통합진보당 와해시키려는 4단계 시나리오’, 38쪽 ‘카맥-통합진보당 사태의 전모’ 참조.

러한 마녀사냥 움직임이 노골적,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초래된 과정은 통진당 내부의 갈등이 격화된 것을 통해서이지, 수구세력들의 마녀사냥을 통해서 통진당 내부의 격화된 갈등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언론들의 부추김이 매우 심했고 이것이 당내 갈등을 격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말이다. 언론은 오히려 이 사태를 연일 크게 보도함으로써 진보세력, 진보운동의 신망을 꺾어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 통진당 사태의 원인

통진당 사태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통진당 사태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그 원인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통진당 사태를 ‘진보의 위기’로 폭넓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보의 위기’가 좁은 의미의 통진당 사태를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위기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극심한 내부 대립은 왜 일어났는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그 하나는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에서 드러난 구 당권파의 부도덕성과 비민주성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견해이다. 이런 견해를 대표하는 사람이 진중권 씨이다. 다른 하나는 도덕성 문제는 사건이 불거져 나오게 된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으며 진짜 원인은 이념적 대립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는 통일학자를 자임하는 한호석 씨이다.

진중권 씨는 5월 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진당 내 당권파, 구민노당 계열이 트위터로 장난질 하는 모양인데,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썩어빠진 구민노당 계열의 책임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분명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NL에선 문제를 정파 간의 권력투쟁으로 몰아가려 할 것입니다. 특정 정파에서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식이죠.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고, 그 짓을 획책한 세력이 있으며, 그들은 반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³⁾

한호석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⁴⁾

“진보당[법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려다가 실패했음에도 그와 그 일파들은 통진당을 이렇게 진보당이라고 부른다./필자]을 위태롭게 만든 파국적 사태의 원인은 당권교체 문제를 놓고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충돌한 당내분쟁이다. 당내 분쟁이 극도로 격화되어 파국적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3) 진중권 씨와 같이 자주파의 패권추구를 위한 부도덕한 행태가 구 민노당 분열과 분당의 원인이었다는 데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는 『한국진보정당 운동사(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 분당까지)』(조현연 지음, 후마니타스, 2009)를 보시오. 그는 자주파의 종북주의가 그같은 패권추구 행태를 낳고 있다고 진단한다.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박상훈 등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론적 대부는 최장집 교수다. 본 자료집 57쪽, <중앙일보> 5월 15일자 최장집 교수 인터뷰를 보시오.

4) 본 자료집 32쪽, 한호석-신당권파 출현과 그 이후 참조.

“진보당의 파국적 사태를 도덕적인 정파와 부도덕한 정파가 비례대표 경선부정이라는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 보는 도덕적 견해도 있으나, 파국적 사태에 개입된 ‘도덕문제’는 파국적 사태의 촉발계기에 지나지 않으며, 파국적 사태의 발생원인은 어디까지나 구 당권파와 신당권파의 분쟁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해 온 진보정치 활동가들은 당내 분쟁이 급속도로 격화되어 폭발한 이번 파국적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당 안팎에서 벌어진 폭로선동과 퇴출선동이 너무 위압적이어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지만,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파국적 사태를 몰고 온 당내분쟁의 본질은, 구당권파를 ‘파렴치범’으로 낙인찍은 당 안팎의 무수한 선동가들이 일제히 목청을 높인 ‘도덕문제’가 아니다. 당내분쟁의 본질은 구 당권파와 신당권파의 정치 문제다. 도덕적 관점을 접고 정치적 관점을 세워야 당내분쟁의 본질이 시야에 들어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당권파와 신당권파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이념 문제를 당내 분쟁의 본질로 규정할 수 있다. 진보당의 정치이념 구도를 살펴보면, 구당권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주파이고, 신당권파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한 자유파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파의 정파연합이다.”

“다시 말해서,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충돌은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자주파와 중도우파연합의 충돌인 것이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유파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파가 손잡은 중도우파연합 신당권파가 자주파가 주도하는 진보당을 자기들이 주도하는 진보당으로 변질시키려는 것, 바로 이것이 파국적 사태를 몰고 온 당내 분쟁의 본질이다.”[이 말대로라면 자유파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도록 자주파들에게 강력히 선동한 한호석 씨는 자주파와 중도우파연합과의 이런 당권 쟁탈전 발생을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필자]

통진당 사태가 비례대표 선출 문제 때문에 크게 불거져 나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 의석 분포 문제와 당권 소유 문제,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음이 사실이다.(현재 통진당에서는 의회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석 분포가 당의 활동과 당권을 좌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선출에서 총체적 부정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갈등이 크게 불거져 나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설사 이번 통진당 사태에 비례대표 의석 지분 문제와 당권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극심한 대립상황과 파국적인 사태로 나타났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통진당 사태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부정선거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통진당 문제의 전부가 부정선거 문제, 민주주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진중권 씨의 주장만큼이나 일방적이다.(진중권 씨의 주장 역시 일방적이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하고 부정한 선거의 문제들이 지난날에는 곧잘 자주파와 평등파 간의 타협을 통해 봉합되어 왔기 때문이다.)

도덕문제는 당내분쟁의 촉발계기일 뿐 발생원인은 아니라는 주장은 말장난이다. 계기라는 것과 원인이라는 것은 서로 배제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국어사전에 보면 계기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결정되는 근거나 기회”라고 되어 있다. 또 “철학에서, 사물의 운동변화발전의 과정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사정

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동아 국어사전』 참조)

이런 사전적인 말뜻과는 별개로 한호석 씨는 계기라는 말을 “지극히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인 사정”이라는 뜻으로 쓴 것 같다. 그러나 통진당 구당권파의 부정선거 문제, 예컨대 온라인 투표에서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나 오프라인 투표에서 투표함을 들고 현장을 방문하여 투표하는 문제 등은 다들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도덕 문제는 결코 우연적인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터지고야 말 것이 뒤늦게 터진 “필연적”인 문제다.

또 비례대표 의원 경선에서 당권파의 독식 문제와 이런 부정선거 문제가 결부됨으로써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지 단지 비례대표 선출에서 비당권파의 지분이 적었다는 사정, 당권파가 독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에 당선된 윤금순 후보가 사퇴의사를 밝힌 데서 이 점은 확인된다. 그녀는 비록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자신을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총체적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사퇴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가 큰 쟁점이 아니라면 그녀가 과연 자진사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받아들였겠는가?

더구나 이 사태의 본질을 정치이념의 문제로, 자주파와 중도우파연합의 충돌로 규정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른바 동부연합파가 아닌 인천연합파와 울산연합파는 당권파의 편에 서지 않고 사민주의자들과 함께 혁신비대위에 참여했는데, 그 인천연합파와 울산연합파는 자주파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 분파들이 자유파인가, 사민파인가? 그들이 자주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함께 <진보연대>라는 전선체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고 또 민주노총 선거에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가?

통진당 사태는 오래된 패권주의 문제가 3자야합당을 통한 당권파만의 의회진출 성공(?)이라는 우연적인 계기를 통해 터져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3자야합이 잘 유지되었다면 그런 문제는 또 덮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3자야합은 애당초 잘 유지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터지고 말 것이 터진 것이다.

구민노당에서 자유주의 정파인 국참당과 통합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을 때 한호석 씨는 왜 같은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과 대통합하지 않고 왜소한 국참당과 소통합하려 하느냐는 비판에 대해 응답하면서 민주당은 세력이 커서 통합하면 먹히게 되지만 국참당은 세력이 작아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⁵⁾ 이런 패권적인 발상 속에 이미 지분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당이 파열할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다. 그리고 구 당권파는 이처럼 토사구팽하는 태도로 총선에 임했고 그 후에는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한 사람으로 하는 방향을 추진함으로써 구국참당 출신의 유시민을 배제시키고자 했다.⁶⁾

이런 패권적인 태도는 구국참당 세력에게만이 아니라 구진보신당 계파에게도 나아가 자주파 안의 비패권 분파인 울산연합파나 인천연합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자기 계파 이외의 일체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런 패권적인 태도를 취함과 더불어 그런 패권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전략공천 명부 작성의 투명성 문제와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배정에서 경선자를 홀대한 문제 등을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5) 본 자료집 58쪽, 한호석, [칼럼] 진보정치, 고립주의와 결별하라! 참조.

6) 본 자료집 61쪽, 박재훈, 통합진보당, ‘진보당’ 개명…당권-대권 분리 없애. 참조.

무엇보다도 온오프라인에 걸친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3자야합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당권파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이번 통진당 사태는 이른바 자주파 운동권의 오래된 관행인 패권주의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가 구당권파의 국참당과의 3자야합 정당 건설을 통한 의회진출과 집권(교섭단체 구성과 이를 발판으로 한 연립정부 참여)이라는 무모한 전술과 충돌하여 일어난 것이다.

3) 통진당 사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입장

이번 통진당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갈래이다. 통진당이 - 혁신을 통해서든 봉합을 통해서든 -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입장이 그 하나이고, 통진당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으므로 그 정당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접고 진보정치의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른 하나이다. (물론 통진당도 다른 대안도 모두 실패하기를 바라는 입장도 있지만 그런 반동적 입장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범위의 밖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이와 관련하여 동요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집은 ‘조건부 지지 철회’의 입장인데, 이는 “일단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되, 혁신비대위의 조치 결과를 보고 이후 재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지 않는 한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것이다.⁷⁾ 이런 입장은 통진당이 태생적으로,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입장에서 서 있지 않다. 이 입장은 주로 통진당이 동부연합파가 패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또 노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며,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동부연합파 및 (신)자유주의 정파와 하나의 통일체인 당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울산연합파처럼 통진당 구당권파가 아닌 통진당 내의 여러 정파들,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여 민노당 대의원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안을 일차 부결시켰다가 이후 3자야합 합당 안에 찬성한 인천연합파, 그리고 3자야합 합당이 이루어진 이후에 현실론을 내세워 통진당을 지지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내 여러 산별지도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진보세력 내에서 제일 먼저 윤금순 후보를 비롯한 비례대표 순위경선에 참여한 후보 전원 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으로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촉구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겠다.⁸⁾

그러나 이 입장은 자유주의와 진보라는 서로 상충하는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뭉쳐서 통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진당 사태는 직접적으로는 이념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서로서로가 “대의가 아닌 실리를 위해” 제 나름의 계산을 하고 기계적으로 결합했다가 실리를 못 챙긴 쪽에서 권력 즉 국회의원 의석 배분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열음을 내게 된 것이다.(이 지점은 앞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이념 문제가 가로놓여 있음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서로 추구하는 대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실리추구 상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손을 잡은 것이므로 실리추구 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 결합이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7) 본 자료집 62쪽,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9차) 결정문 참조.

8) 본 자료집 63쪽, 통진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가 부정경선에 대한 사과를 남기고 사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기자회견 참조.

뿐만 아니라 이런 입장은 통합진보당이 이념적으로 올곧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설사 노동자들(현장 노동자보다 노동조합 관료일 가능성이 많다!)이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보다 많이 배분받는다고 해도, 그 정당의 정체성이 자유주의와 함께하는 정당이라면 도저히 사회주의를 지향이념으로 할 수 없다. 자본주의를 재생산하자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변혁하자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배제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이 국참당과 통합하기에 앞서 강령을 바꾸어 사회주의 이념지향을 삭제한 것은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 중집의 입장은 그 동안 통진당 지지를 밀어붙여 온 데 대한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계급운동의 방향에 서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10년 전 민주노동당이 창당될 당시에 가진 진보성조차 견지하지 못하고 후퇴한 입장인 것이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더욱 문제적이다.

통합진보당이 실패하면서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정치세력화 자체가 그런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노동자 정치운동 자체를 포기할 것을 주장하는 조류가 엿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 임영일 씨의 주장이다.⁹⁾

“노동자 중심의 정치운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고민은 십분 이해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지금은 일단 멈추어야 할 때이다. 노동정치=진보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대중조직이 망가지고 있었던 데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밑바닥이 엉망인데, 그 위에 무슨 아름다운 집을 또 짓자는 것인가?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면 정치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 새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가?”

아쉽고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인 듯하다. 당을 새롭게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러면 길이 다시 보일 것이다. 노동정치의 복원을 말하기 이전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그 교두보들을 먼저 건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곧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곧 보궐선거도 있을 것이고, 곧 지자체 선거도 있을 것이니 자꾸 마음이 급한가?”

이 입장은 민주노총 상층부가 진보정치를 혁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백 번 타당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상층부가 민주노총의 전부가 아니다. 민주노총에는 지역과 산별 또는 정파를 가로질러서 많은 훌륭한 현장 활동가들이 있다. 이 현장 활동가들은 이번 통진당 사태를 접하면서 많은 실망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반성도 하고 있다.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진보정치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성찰이 상층지도부 중심의 잘못된 정치운동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비판과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대중의 정치가 노동자 출신 의원의 의회 내 정치로 협애화 되고 말았고, 그것과 결부되어 의회권력을 차지하려는 출세주의와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분파 간, 개인 간 쟁패전이 악화되어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임씨는 이런 현장 활동가들의 진지한 성찰과 분발을 또 하나의 의회주의 정당 건설로 오인하고 있다.

더불어 임씨는 “노동정치의 복원을 말하기 이전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그 교두보들을 먼저 건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않을 교두보들은 왜 만들어지지 못했을까에 대해

⁹⁾ 본 자료집 65쪽, 임영일 - 노동운동, 정당정치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레디앙 기고 참조

서는 묻지 않고 있다. 그 동안의 경험은 오히려 계급적/변혁적 이념과 노선에 견결한 노동자 정치운동과 결합한 계급적/변혁적 노동조합운동의 실천 없이 의회주의 정당과 조합주의적인 노동조합운동만으로 그런 튼튼한 교두보들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은 이번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진보정치운동, 노동자 정치운동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언론에서는 통진당 사태로 통진당만이 아니라 진보와 진보정치 그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위기는 이미 오래된 것이라는 관점에 서 있다. 물론 통진당 사태가 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말이다. 따라서 노동운동 또는 진보운동은 이 심화된 위기에 처하여 낡은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떨쳐버리고 변혁적 노동운동 또는 변혁적 진보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이번 통진당 사태는 진보와 진보정치의 위기인 동시에 그것을 개조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제목의 짧은 글은 이런 입장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¹⁰⁾

“진보정치의 본질적 위기’는 노동자계급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로 보는 그들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노동자를 선거 때 돈이나 내고 표나 찍는 동원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기 때문이다. 결과는 노동운동과 노동정치의 메카라 불리는 울산과 창원에서 통합진보당 후보의 탈락이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외면을 면치 못했다... 이제 다시 노동현장의 노동자들과 정치적인 주체가 하나가 되어 생산현장과 거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투쟁과 정치를 결합시켜 정치와 조직운영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될 것이다.”

발제자는 당연히 이 세 번째의 입장에 공명하고 있다.

2. 노동자 정치운동의 진로 : 쟁점을 중심으로

1) 첫째 쟁점. 진보정치운동의 주체 문제(무계급이나 계급이나?)

진보정치운동을 그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 정치운동이 된다. 진보정치운동의 주체가 항상 노동자 계급만인 것은 아니지만(예컨대 노농동맹)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계급 이외 각계각층 근로민중의 역할은 부차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 단계 남은 사회에서 진보정치운동의 기본형태는 노동자 정치운동이다. 이 지점을 잘못 인식하여 청년학생운동의 역할이 주된 것이라고 보게 될 때 필연적으로 개량적으로건 모험적으로건 피지배 대중의 요구 및 지향과 유리된 관념적인 편향에 빠지게 된다. 통진당의 당권파는 이런 오류를 한 세대에 걸쳐 되풀이하고 있다. 그같은 그릇된 인식 때문에 통진당은 출현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노동을 경시, 무시,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통진당은 출범하면서부터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 아니다”라고 규정받았고 나아

10) 김민수 기자, 핫뉴스, 2012년 5월 13일, <http://hot-news.kr/detail.php?number=6831&thread=22r08> 참조

가 노동운동 일부로부터는 아예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노동자계급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여 노동자정치운동이 진보정치운동 안에서 무슨 특권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태일 동지가 말했듯이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다.” 예컨대 생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여 노동의 가치만큼이나 중시되어야 한다. 자연이 그 자체로 사용가치이며 사용가치 생산의 ‘어머니’라는 점에서(윌리엄 페티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동은 그 아버지이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생태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초계급적으로 노동운동과 생태운동이 적녹연합과 같이 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이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형태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녹연합이라고 할 때에는 가치의 결합은 이야기하지만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혼동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흐트러뜨린다. 녹의 주체는 누구인가? 농민인가? 중산층인가?

2) 둘째 쟁점. 노동자 정치운동의 조직적 형태 문제

(1) 현장권력 쟁취가 곧 정치?

노동자 정치운동의 조직적 형태가 곧 의회 정당이라는 생각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들이 있다. 그 하나는 의회권력 쟁취가 아니라 현장권력 쟁취 운동이 곧 정치운동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노동자 정치운동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회주의와 양날개론을 비판하는 의견이다.

먼저 현장권력 쟁취가 노자간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것이므로 국가권력 쟁취와 다름이 없다거나 그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상 노동자 정치운동을 부정하는 생디칼리즘이라 할 만하다. 물론 개별 자본과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것이 임금인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유보하더라도 민주노조를 쟁취하고 현장에서 노사 대등한 권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계급적 각성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해방은 개별 자본과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총자본인 국가의 권력관계를 바꾸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노동자의 삶은 공장과 직장의 생활에 한정되지 않는다. 노동 생활 안팎에서, 심지어 가정생활에 대해서까지 노동자들은 국가에 의한 통제와 폭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제반 영역을 통제, 지배하는 이 폭력독점장치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바꾸지 않고 노동을 해방하겠다는 것은 유토피아적이다. 더구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임노동의 존재 자체가 국가폭력에 의해 성립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지 순전히 시장관계에 의해 성립,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권력 즉 시장권력은 원천적으로 정치권력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2) 혁명적 전위당 또는 변혁적 대중정당?

다음으로 양날개론을 비판하는 견해 즉 노동자 정치운동을 긍정하지만 개량주의적 정치운동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노동자 정치운동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회주의 정당을 부정하고 혁명정당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의회주의 정당이 바람직한 노동자정치운동 형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경험에서 이미 밝혀진 바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연대운동들이 총파업 등 조직 노동자들의 대중투쟁과 결합하여 자본주의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노동자 혁명의 전망을 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즉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노동조합의 대중투쟁을 정치총파업과 혁명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혁명정당 형태로 노동자 정치운동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이 때

현재의 주객관 정세 하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정치운동은 전위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전위당 운동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선 현 단계에서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자는 것으로서, 운동노선과 관련 객관적 조건의 측면에서 분단과 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남한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체적 조건의 측면에서 대중의 준비정도가 혁명을 명시적 목표로 투쟁할 수준에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양 측면에서 모두 너무 급진적이다. 그리하여 그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전위당은 노동자 대중을 그러한 투쟁으로 추동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투쟁을 선전, 선동만 하는 고립된 상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중정당 형태로 의회주의와 개량주의를 극복하는 변혁적 정치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혁의 과제가 남한 사회의 정치적 조건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 조건은 무엇보다도 분단과 제국주의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예측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경제적인 종속상태의 문제는 남한 사회 당면변혁에서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변혁은 일반적으로 ‘선정치변혁 후 사회경제변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오래된 분단과 전쟁(평화가 아니라!) 상태 아래서 남한의 노동자-민중은 그 변혁 주체역량의 형성이 매우 억압되고 지체되어 있다. 이런 상태는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요구되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반제/반자본의 정치적/사회적 변혁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운동만이(그 이념적/가치적 지향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사회주의임을 분명히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대중을 움직일 수 있고, 대중을 현실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을 때에만 그 운동은 탄압으로 파괴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변혁은 1단계로도 아니고 2단계로도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것을 전망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3) 당이나 전선이나? 민중투쟁전선체 없이 투쟁하는 당, 사회운동적인 정당운동을 실천하기 어렵다.

이 문제 역시 오래된 쟁점이다. 그러나 이른바 좌파진영 안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간주되지 못한 지점이다. 당과 노동조합으로 단순/도식화하여 당이 정치투쟁을, 노동조합이 경제투쟁을 담당한다고 보는 사고방식은 제2인터내셔널 이래 고전적인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도 노동조합을 단지 개량만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 계급의 종국적 해방을 위한, 말하자면 임금제도의 궁극적 철폐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동조합 또한 변혁적/해방적 정치투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 노동조합은 일상적으로 경제적인 요구를 가지고 총자본이 아니라 개별 자본들을 상대로 투쟁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정치적/사회적으로 투쟁하는 경우에도 각 계각층의 각 영역에 걸친 사회적/정치적 요구들을 모두 자신의 요구로 받아 안고 투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피지배계급의 모든 사회적/정치적 요구를 받아 안고 투쟁하기 위해 노동자 정당 형태의 운동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이 모든 사회적/정치적 요구들을 받아 안고 투쟁하는 경우 의회주의적으로 받아 안는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당이 노동조합을 비롯한 제반 대중단체들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회에만 기대지 않고 의회 밖에서 대중투쟁을 수행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각계각층의 대중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연대/연

11) 본 자료집 67쪽,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칙과 방향’ 참조

합하여 투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대중투쟁 연대/연합체, 즉 민중투쟁 전선체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선체는 각계각층의 대중들에게 서로 의지하는 곳이 될 것이며 또 각계각층의 민중이 하나로 단결하여 총자본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지점을 경시하면 노동운동은 각계각층의 대중들과 분리되어 투쟁함으로써 총자본에 맞서는 데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의회주의 정치로 대중들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제3세계 나라들에서는 따라서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성화됨과 동시에 민중투쟁 전선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게 된다.(예 필리핀)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비의회주의적 상황 아래서는 노동자 정당 역시 의회주의적인 활동으로서는 기대하는 바 효과를 가져올 수 없고 대중투쟁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의회주의 정당에 대한 대안으로 모두들 사회운동적 정당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정당이 사회운동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대중운동단체들과 긴밀하게 연대/연합하여 정치투쟁 전선체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요컨대 변혁적인 노동자 정당은 의회든 의회 밖이든 자신의 정치투쟁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민중투쟁 전선체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3) 셋째 쟁점. 진보정치운동 복구의 경로 문제.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외연확대(이른바 재구성)를 통해 복구할 것인가, 진보정치운동의 급진화를 통해 복구할 것인가? 잘못된 역인과 재구성의 문제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이름하에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외연확대를 통해 진보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는 통합진보당의 파국을 통해 실패로 드러났다. 2007년 대선 실패 이후 민주노동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존 진보정당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무성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당원들이 진보정치를 혁신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서 진보신당을 창당했던 적이 있다.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진보신당의 도전은 결과적으로 진보정치운동, 노동자 정치운동을 더욱 깊은 위기에 몰아넣은 것으로 귀착되었다.

그런 쓰라린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접근에 방점을 두는 움직임들이 있다. 통진당 혁신 비대위는 이런 방향을 취하고 있다. 통진당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고 민주노총 안팎의 여러 정치적 운동단체들이 결집하면(시민운동적인 진보운동들까지 포괄하여) 훌륭한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고 노동자 정치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움직임은 자유주의 세력만 배제하고 지배적인 정파의 패권적 작풍만 제어하면 종래의 노동자 정치운동, 진보정당운동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노동자정치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성공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남한 사회 현실에서 노동자정치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은 변혁적 성격을 지니지 않을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진보정치운동, 노동자 정치운동의 실패는 변혁적 성격을 결여한 데 있다는 견해가 있다. 기존의 진보정당들의 운동은 통진당이든 진보신당이든 모두 개량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실패했으며 따라서 그 정체성을 변혁적인 정치운동으로 혁신해야 한다.

사실 이 정당들은 모두 신자유주의 반대에 머물렀으며, 의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연

맹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있는 ‘반자본 사회변혁’ 수준의 급진성도 보여주지 못했다.¹²⁾ 이것은 그런 급진적 강령으로 선거에서 득표를 하여 당선자를 내기 어렵다는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고려가 당의 활동을 지배하는 한 변혁적 진보정치활동을 실천하기 어렵고, 그런 변혁적 실천이 밀받침되지 않는 한, 개량적인 선거강령으로 선거에 임하는 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선거에서 진보정당이 많은 득표를 하고 다수의 당선자를 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¹³⁾ 그러므로 한국사회 지금의 현실에서 그 정체성을 변혁적으로 급진화하는 것이 노동자 정치운동, 진보정치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이렇게 정치운동의 정체성을 변혁적으로 급진화시킨다고 할 때 그것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진보정치세력들을 어떻게 광범위하게 동참시킬 것인가, 특히 노동조합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된 정치운동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현실적인 과제로 된다. 이런 지점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정치운동은 아무리 지난 시기 진보개혁적 정치운동의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할지라도 소수 급진적인 분자들의 자족적인 실천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정치운동의 정체성을 급진화 시키되 광범위한 진보세력 및 노동조합운동과 함께 실천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광범위한 진보세력 및 노동조합운동과 함께하는 이 과제는 역으로 운동의 정체성을 어떤 수준으로 급진화시킬 것이며 또 어떤 이념과 노선으로 급진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다.(지향하는 이념은 사회주의를 분명하게! 현 단계 변혁의 과제는 낮은 수준의 반제/반자본의 정치적/사회적 변혁으로!) 현 단계 이행강령의 구체적인 지점은 따로 검토하겠다.

4) 넷째 쟁점. 노동조합 운동(총파업)과 노동자 정치운동(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이의 선차성 문제 또는 그 결합의 문제?

(1)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가져온다.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오래되었다. 그러나 노동운동 위기론의 초기만 해도 노동조합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8년 옛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이후로는 노동자 정치운동, 진보정당운동 역시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을 받아 왔다. 그리고 이번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노동조합운동보다 노동자 정치운동이 보다 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노동자 정치운동의 혁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운동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노자간의 계급 역관계를 바꾸어내는 데 있어서 노동자 정치운동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앞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복원에 선차성을 두고 노동자 정치운동의 복원은 차후로 추진하자는 견해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 노동자 정치운동에 선차성을 두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무엇이 선차적이나 라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노동운동은 경제

12) 본 자료집 70쪽, 공공운수노조연맹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 정치방침 참조

13) 이 지점에 관련해서는 사회당의 기본소득제와 같은 실현가능한(?) 사회적 공화주의 정책이 선거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14) 현실적으로 폐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폐기를 선동한 구민노당이 지난 4.11 총선에서 비교적 선전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투쟁, 정치투쟁 및 이데올로기 투쟁을 긴밀하게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어떻게 잘 결합시키고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이냐 라고 질문해야지 어느 것에 더 선차성을 두느냐 라고 질문할 경우 필연적으로 조합주의적인 편향이나 정치주의적인 편향에 빠지게 된다. 또 이런 식의 질문 속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소홀히 할 경우 노동운동 전반이 변혁적 지향이 결여된 실리추구적 운동으로 퇴화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총파업이나 정치세력화와 당 건설이나 라는 식으로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질문은 ‘위기에 처한 노동조합운동’을 복구하는 과제와 ‘위기에 처한 노동자 정치운동’을 복구하는 과제를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 전체’를 복구하는 총체적 과제 속에 위치 짓고 서로 긴밀하게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2)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 :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운동을 지원하고 노동자 정치운동이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적 조직화를 지원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바 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을 긴밀히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 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원칙론에 그칠 것이다.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정당운동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 하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치운동의 지렛대로 복무하는 방향이다. 마르크스의 지도 하에서 제1인터내셔널에서 채택한 ‘노동조합,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방침은 “노동조합들은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방향을 향하는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런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치운동을 지원하는 방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 역으로 노동자 정치운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 그것이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자본주의가 독점단계로 발전하던 당시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운동이 독점대기업들에서 비숙련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계급적 산별노조를 건설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 제2인터내셔널은 사실 노동자 정당 중심의 인터내셔널이었으며, 이 정치운동 인터내셔널이 노동조합 인터내셔널(헤이그 인터내셔널)을 추동하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급격히 무너졌으며, 그로 인해 노동자 정치운동이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을 계급적 범위에서 확대하는 과제가 노동조합운동 자신에게 맡겨졌고 취약한 민주노조운동은 그 임무를 방기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 낮은 조직율과 실리주의화하여 계급적으로 연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운동, 즉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이다.

그러므로 이제 복구하고자 하는 노동자 정치운동은 기존의 노동조합운동 즉 민주노총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고 활동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민주노총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일, 2천만 노동자계급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받아 안는 정치운동이 되어야 한다. 흔히 비정규노동자를 대변하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대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이렇게 지원받아야 할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무권리 상태에 있는 모든 노동자이고 어용노총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중요하게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총은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임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안에서 상대적

으로 선진적인 부분을 변혁적 노동자 정당으로 묶어세우고, 이 힘과 민주노총 밖의 변혁적 노동운동 역량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노동자계급 전체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변혁적으로 고양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5) 다섯째 쟁점. 올바른 노동자 정당의 조직적/투쟁적 상의 문제

“변혁적” 노동자 “대중” 정당은 노동현장을 기초로 조직되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자 정치활동을 긴밀하게 결합시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노동시간이 길어서 사업장 밖에서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조건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방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장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의 통일은 향후 경제관계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베네수엘라 철강산업에서의 사회주의 변혁 실험을 참조하세요.)

올바른 노동자 정당이 의회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말은 무성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사회운동적 당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사회운동인지는 많이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사실 요즘 사회운동은 대체로 캠페인 성격의 운동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 경제대공황이 깊어지고 정치가 더욱 우경화할 경우 그런 캠페인 성 운동으로는 지배세력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만들어질 노동자 정당은 전투적으로 투쟁하는 정당의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투쟁정당”의 모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러한 정당이 과연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법률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계급 역관계의 문제이다. 현재의 전국공무원 노조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합법적이지만 지금 법외노조로 취급되고 있다. 투쟁하는 변혁적 노동자 정당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런 고난을 거치지 않고 변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하겠다.

6) 여섯째 쟁점. 변혁적 노동자 정당 건설의 경로와 방도 문제

새로운 노동자 대중 정당이 의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변혁을 목표로 대중적으로 투쟁하는 정당이고자 하면 그 건설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노동자 정당은 상층부의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주도 아래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도하는 한 지난 통진당 창당과 4.11 총선 과정에서 보인 비계급적이고 비운동적인 모습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제2의 정치세력화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집을 구성하는 조직에서 파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추진기구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¹⁵⁾

15) 본 자료집 71쪽, ‘변혁적 현장실천과 변혁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국 활동가 모임을 제안하며’ 참조

둘째, 기존의 정파/계파들로부터 자유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정파/계파라 함은 노동조합의 집행권력이나 노동자정당의 의회권력을 추구하며 활동해온 부분들을 말한다. 물론 이런 기존의 정파/계파를 비롯하여 정치적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이 정당건설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건설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참여하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의사의 집합으로 되어야지 정파단체들의 합의(표결이든 만장일치든)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셋째,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은 논의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많은 쟁점들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 쟁점들을 어물쩍 다루고 상충부에 위임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설 과정에서부터 그런 과두에게 위임하는 관행을 불식해야만 건설 이후에도 그런 관행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한편, 수평적으로는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지니고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현장에서 서로 연대하고 함께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정치 총파업 한번 했다고 변혁적인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실천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신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넷째, 누가 초동주체가 될 것인가? 과거에 정당을 만들 때처럼 전국적인 ‘초동모임’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인가? 그런 방식은 아무래도 기존의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중적인 정당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초동주체부터 대중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이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현실적으로 산업별, 지역별 관계일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것에 선행하여 산업별, 지역별로 초동주체들이 나와서 그러한 논의와 실천이 활성화되도록 추동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변혁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그 운동이 지향하는 이념과 노선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에 자신이 지니고 있던 이념과 노선에 대해 새롭게 재창조하는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난날의 민주노동당처럼 정파연합당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편의적으로 의견그룹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분열!) 또 어떤 이념과 노선을 취할지를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도 없을 것이다.(패권!) 지금 통진당이 겪고 있는 격심한 갈등도 그런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바가 적지 않다. 패권 문제는 권력문제인 동시에 이념과 노선 문제인 것이다. 아마도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대중적인 학습과 토의를 통한 최대한의 통일을 모색하는 수밖에 왕도가 없을 듯하다.

[일시별 경과 보고]

일시	분류	내용
2011.11.13	선언	‘2012 진보변혁적 노동운동 출정선언’ 발표 •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홍보물로 배포
2011.11.20	상황	민주노동당-통합연대-국민참여당 3자 통합당 합의가 전격적으로 발표됨
2011.11.21	제안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 제안 • 민주노총 전현직 중집위원, 산별조직, 지역본부, 지부(지회) 전현직 임원 등 노동조합 주요 간부 101명 연명
2011.11.24	분석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인가? 통합당 강령 비판... 자본주의 극복 포기한 반동적 내용.[레디앙, 박찬식]
2011.11.25	토론회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 긴급토론회 •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긴급토론회 개최. 이날 참석한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들은 모두 신자유주의 정당과 통합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함. 나아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발제 내용에도 동의가 이뤄짐. • 참가자들은 이밖에도 3자통합당에 대한 규탄 발언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의 원칙과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2011.11.27	상황	민주노동당은 당대회를 열어 90.1% 찬성으로 3자 통합을 승인하고, 국민참여당도 당원총투표를 통해 89.33%로 3자 통합을 승인
2011.11.29	회의	민주노총 15차 중앙집행위원회 • 정치방침(배타적 지지)과 선거방침(4/11총선)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장기적인 정치방침은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고, 4/11총선 선거방침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이날 중집 토론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2011.11	선언	3자통합 반대와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강원지역 선언자 - 자유주의 세력과 야합한 3자 통합을 반대한다
2011.12.1	제안	진보신당-(가칭)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제안 • 12.29 1차례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사회당과의 통합으로 귀결
2011.12.11	상황	‘통합진보당’ 출범식
2011.12.12~29	선언운동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간부 및 현장활동가 1천인 선언운동” 전개 • 긴급토론회 제안자로 미처 참가하지 못했던 활동가 포함 총 173명의 공동제안으로 시작
2011.12.13	회의	민주노총 16차 중앙집행위원회 • 진보정당이라 함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으로 정리(진보정당을 3당으로 정리하는데 일부 이견도 있었음을 회의록에 남김)
2011.12.21	회의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 간부 및 현장활동가 1천인 선언운동 선언자 회의’ 개최 •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 △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으로 확대 실시 △ 조합

		원 선언운동본부 구성 △ 선언자 대회 개최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응 등을 결의
2011.12.21	입장	사노위 - 민주노총 정치방침 10문 10답, 노동자계급정치를 복원하자(소책자) 선언운동본부 1차 대표자회의 개최
2011.12.28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언 참가자들은 각 지역과 산업별로 대표자(선언운동본부 공동본부장)와 실무담당자를 정하고, 2012. 1. 14. 선언자대회 개최 등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 선언운동을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으로 조합원 선언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함 선언운동본부 기획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 선언문 중 대안 부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 대안과 관련하여 산별 대표자들의 문제의식을 받아 안고 3자통합당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성찰과 자기혁신의 내용이 포함되고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이라는 목표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조합원 선언운동 초안을 잡음
2011.12.29	선언운동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간부 및 현장활동가 1천인 선언운동은 총 1,552명의 전현직 간부가 선언운동에 동참
2012.1.5	선언운동	선언운동본부 -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해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실천을 대중적 선포.
2012.1.12	입장	노혁주 -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칙과 방향
2012.1.14	선언운동	선언운동본부-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 회의실에서 활동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선언자대회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본부장단 결의발언에 이어 '기존의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사업 평가와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 실시
2012.1.14	입장	사회진보연대-2012년 총대선, 민주노총 정치방침 비판 10문 10답(자료집)
2012.1.19	회의	민주노총 1차 중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사업 평가 △2012년 정치사업 계획 △국가재정 활용방안 △정치방침 등에 대해 대응안을 마련해 선언운동 참가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공유.
2012.1.26	회의	민주노총 3차 중앙집행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선 선거방침은 정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총선 4대 방침 이행방안을 일부 보완해서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에 제출하고 이행방안 중에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1월 31일 중집회의를 개최하여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정치방침 건'은 총선 이후에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함.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는 전국정당 지지율로 결정. 사실상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이므로 격론 끝에 결정하지 못함
2012.1.31	회의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안건과 관련해 선언운동 참가 대의원을 상대로 해설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수시로 대의원 모임을 진행하는 등 대응 사업을 펼침. '정치방침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다루고, 총선방침만 의결한다'는 민주노총 집행부 결정에 따라, 총선방침이 전체 사업계획 속에 문혀 축소 논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순변경 등을 관철했으나, '총선방침 논의 때까지 대의원 대의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선언운동본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선방침은 정족수 미달로 논의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별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이 진행
2012.2.4	제안	<p>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 4차 회의 갖고 제안문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중심의 대중 진보정당 건설
2012.2.4	회의	2012 진보변혁적 노동운동 출정선언 선언자 간담회
2012.2.8	회의	<p>민주노총 5차 중앙집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당명부 1당 지지’와 ‘반MB 야권연대 지지’를 골자로 한 선거 방침을 결정. • 이 과정에서 일부 중집위원이 퇴장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표결 강행. • 선언운동본부에 참가하고 있는 중집위원 공동명의 성명을 발표함
2012.2.10	분석	한호석-깃발파와 대중파의 파장으로 와해된 인민민주당
2012.2.10	회의	공공운수노조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열고 정치방침 결정
2012.2.17	선언운동	<p>선언운동본부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운동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1 선거방침 논의를 위한 임시대대 소집 요구 제안서
2012.2.19	입장	노혁추 - 2012년 총선방침
2012.2.19	상황	진보신당, 사회당 각각 당대회를 열고 통합 결의
2012.2.23	회의	진보교연 총회 결의문-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기반을 둔 진보좌파연합정당 건설
2012.2.27	선언운동	<p>선언운동본부 산업-지역별 대의원 서명을 받아 2012. 2. 27. ‘선거방침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서’를 민주노총 집행부에 제출.(851명 대의원 중 311명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집행부는 소집요구서 요건 보완 요구 후 임시대대 소집 • 황당한 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은 조직의 단결만 훼손할 것 성명서 발표
2012.2.27	회의	<p>금속노조 32차 임시 대대에서 정치방침 현장 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이 8일 중집위에서 결정한 선거방침 중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을 반대한다며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를 통합진보당으로 집중하지 말고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사회당 포함) 모두에 열어야 한다” 현장 발의
2012.2.28	선언운동	선언운동본부-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기자회견(금속노조 회의실)
2012.3.2	선언	<p>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변혁적 노동운동·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비정규 노동자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변혁적 노동운동·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비정규 공동투쟁’
2012.3.14~18	상황	<p>통합진보당 내부 경선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 명부보다 투표수가 많은 투표소가 7곳이 발견. • 투표 명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여러 건 보고. • 유명당원 존재, 동일 IP에서 중복 투표 등 대리 투표 정황이 감지
2012.3.20	상황	통진당 이정희와 민주당 김희철 사이에서 야권연대 후보를 결정하는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 폭로됨
2012.3.22	회의	<p>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언운동본부 안건 제출 • 임시대의원대회 성원부족으로 무산. 선언운동본부와 임시대대 소집요구 대의원들은 ‘간담회’ 등을 통한 토론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에 따라

		<p>소집요구 대의원을 중심으로 대회장에 남아 토론을 진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대대 무산에 따른 성명서 발표
2012.3.23	상황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결정. 후임 후보는 당권파인 이상규 후보로 변경
2012.3.31	토론	노사과연 토론회-“다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2012년”
2012.4.11	상황	통진당은 10.28%의 득표율로 비례대표 6번까지 당선
2012.4.12	상황	<p>통진당 부정경선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준호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2012.4.12	분석	한호석-민주주의혁명 지체시킨 야권연대 총선패배
2012.4.15	분석	통진당 정성희 총선 약평
2012.4.22	회의	<p>선언운동본부 확대 대표자 회의 개최(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대대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계급 정치의 쇠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조직민주주의와 대중투쟁 후퇴가 위험수위에 이룸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방향 모색을 위해 4. 22.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선과정 평가 및 올바른 정치세력화 방향 △향후 대중운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 • 계급적 변혁정당 건설과 대중투쟁을 함께 열어놓고 토의해 가기로 함.
2012.4.22	회의	<p>진보신당 전국위원회 열고 총선평가 및 향후 계획 수립 토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회의를 통해 총선평가와 향후 계획 수립 확정짓고 지역별 토론회 진행 중. 6월 초에 전국위원회 열어 총선 평가와 향후 계획 확정할 예정임.
2012.4.26	토론	한국노동사회연구소-‘4.11 총선에서의 노동정치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2.5.2	상황	<p>통진당 조준호 보고서 발표를 겸한 공식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체적 부실·부정선거 당 근본적 쇄신 불가피
2012.5.3	회의	<p>민주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진당에 대해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 요구
2012.5.4	토론	15개 산별, ‘4.11총선 평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토론회 개최
2012.5.4	성명	<p>통진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가 부정경선에 대한 사과를 남기고 사퇴-전여농 기자회견</p>
2012.5.5	상황	<p>통진당-전국운영위원회는 1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파행으로 끝나게 되고, 회의 중 퇴장한 이정희 대신 유시민이 의장 자격으로 전자투표를 통해 혁신결의안의 최종안을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대표단과 비례대표(경쟁 부문 전체) 전원 사퇴 결정
2012.5.5	분석	한호석 - 파쟁에 휘말린 통합진보당, 어디로 가는가?
2012.5.7	회의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집담회
2012.5.7	토론	올바른 노동정치 실현을 위한 대전지역 2차 토론회
2012.5.7	논평	노동전선-통진당 부정선거, ‘책임회피’넘어 ‘올바른 노동계급정치 실현’ 계기로 삼아야
2012.5.7	회의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 집행위 열고 통진당 사태에 대한 입장 결정
2012.5.8	상황	통진당-이정희,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 열림
2012.5.9	논평	사노위-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실부정 선거’ 사태에 대해
2012.5.10	성명	금속노조 중앙위 성명서-통합진보당은 반성과 혁신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2012.5.10	성명	통진당 사태 관련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 성명서
2012.5.10	토론	진보교연 토론회-“19대 총선, 그리고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2012.5.10	토론	현장노동자회 울산, 진보신당 울산시당에서 공동 주최 토론회- “4.11총선 평가

		와 진보정치”
2012.5.10	제안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 총선평가가 포함된 공동발제문 수정 보완
2012.5.10	논평	노혁추-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에서 완전한 부르주아 정당으로의 이행을 재촉하다
2012.5.10	논평	해방연대-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사태에 대하여
2012.5.10	입장	사회진보연대-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과 결별해야 한다
2012.5.10	상황	통진당 유시민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후보들이 현장에서 '당신 당은 왜 애국가를 안 부르느냐'는 질문을 한다”는 발언을 통해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국가 권위적인 의례를 싫어할 수 있고 나도 좋아하지 않지만 국민의례 거부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지 고민이다. 왜 이런 토론은 금지처럼 받아들이느냐”고 발언
2012.5.10	논평	좌파노동자회-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2012.5.11	회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진당이 민주노총의 쇄신요구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지지철회를 비롯한 당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것 결정
2012.5.11	분석	한호석-자주파의 초라한 모습과 두 개의 논리적 함정
2012.5.12	제안	변혁적 현장실천과 변혁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가 1차 모임
2012.5.12~14	상황	통진당-중앙위원회의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위원회의 직전 이정희는 대표직 사퇴 단상 접거와 대표단 폭행으로 회의 유회 14일에 전자투표로 혁신결의안 통과 공동대표단과 비례대표 전원 사퇴 결정이 공표되었고, 결의안에 따라 혁신비상대책 위원회가 조직
2012.5.16~18	분석	경향신문-진보정치의 위기
2012.5.17	회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론 끝에 민주노총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조건부 철회, 혁신비대위 중심으로 쇄신안 관철 촉구, 민주노총 자기혁신 위한 제2정치세력화 특별기구 설치 결정
2012.5.17	분석	한호석-신당권파 출현과 그 이후
2012.5.17	입장	현자 금속연대 신문-진보정치 실패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2012.5.20	상황	통진당-혁신비대위에 맞서는 당원비대위 구성
2012.5.21	기고	임영일 교수-노동운동, 정당정치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레디앙 기고
2012.5.22	성명	“민노총, 부정·의혹 투성이 통합진보당과 결별을” 울산선언운동본부 촉구
2012.5.22	논평	사노위-민주노총 중집, 아직도 반성없이 통진당 쇄신을 기대하는가?
2012.5.22~25	상황	진보신당 지역별 토론회(대구, 경기, 울산, 창원, 강원, 인천)
2012.5.22	분석	한호석-통합진보당 와해시키려는 4단계 시나리오
2012.5.24	성명	공공연구노조 성명서-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의 사퇴가 노동과 진보를 살리는 길이다!
2012.5.24	성명	공공연구노조-통합진보당 부정선거 논란과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
2012.5.25	입장	노동전선 김태연-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현장활동가들이 주체로 나서자!
2012.5.26	분석	한호석-정파연합 파탄으로 증폭된 분당위협
2012.5.28	논평	노혁추-야권연대와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본격화 하자
2012.5.30	기고	카맥-통합 진보당 사태의 전모(서프라이즈)

[주제별 자료]

1주제 : 통합진보당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원인과 입장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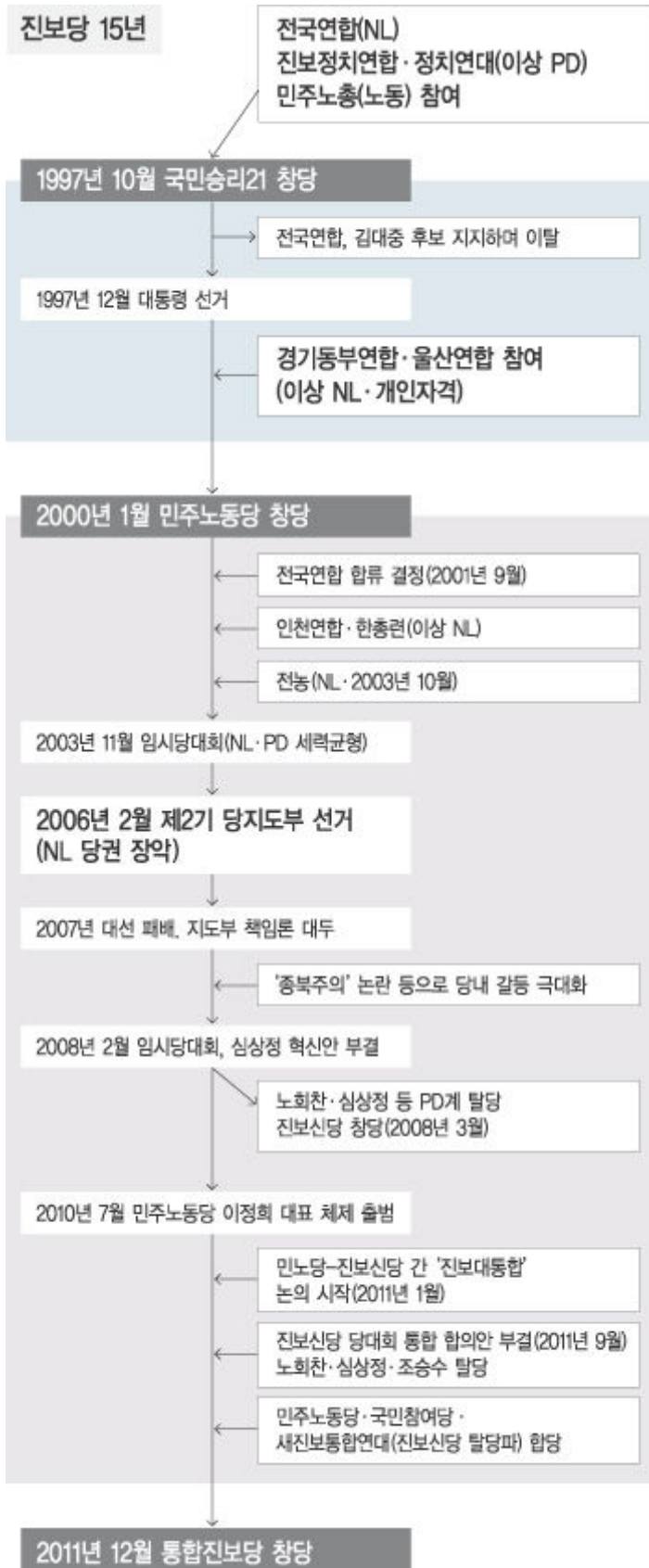
1. [진보정치의 위기]

(1) 왜 위기인가

(경향신문, 2012년 5월 16일, 김진우 기자)

민주화 이끌었지만, 스스로는 민주주의 규범에 적응 못해 지난해 12월5일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했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는 진보정당을 표명한 것이다. 그로부터 5개월 뒤 통합진보당에서 그 ‘눈높이’는 사라졌다. 지난 12일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당권파는 고성과 욕설로 진행을 방해하다 단상으로 몰려들어 폭력으로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들은 조준호 공동대표의 머리칼을 잡고 구타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도 안경이 벗겨지는 등 폭행을 당했다. 진행 요원들에게 주먹질을 했고, 멱살잡이가 난무했다. 이 모든 장면이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장 진보적이며 민주적이라고 자칭하는 진보정당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사태는 통합진보당이 대중에게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부정선거 논란이나 정파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의 원칙과 기본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다.

‘총체적 부정·부실’이든, ‘일부 부실’이든 비례대표 경선 과정이 잘못됐다면 당장 효력을 정지시키고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서 정파의 목적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사태였다. 그러나 당권파는 ‘부정 경선’이 잘못된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다. 당원들이 합의한 규칙과 규범인 당헌·당규를 스스로 무시하고, 당내 공식의사결정 기구를 폭력으로 무산시키면서도 당당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선 민주주의 절차는 무시되어도 괜찮은 것이었다. 이번 사태는 선거 부정과 폭력이라는 극한 양태로 민주주의를 할 줄 모르는 진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진보정치에 대한 심대한 신뢰 위기를 불러왔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정치는 시민들로부터의 정당성이 그 생명을 이루는데 일부 반민주적 세력으로 인해 진보정치 전체가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비례대표 당선자도 “진보는 동시대인의 상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초월해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명분도 공당의 민주적 절차를 폭력으로 파괴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선거 파문의 정점을 찍은 중앙위 폭력 사태는 그간 진보정당에서 방치되어 온 민주주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목표의 정당성,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과 관행이 굳어졌던 것이다.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민주주의의 규범과 절차에 대한 요구들이 패권주의 논리에 질식당해왔다. 특정 정파의 패권주의가 정당의 골간을 흔들고 당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은 옛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적됐다. 당시에 당직

이나 공직 선거 과정에서 ‘세팅 선거’(특정 정파가 미리 선거전략을 세운 뒤 당원들에게 지침을 내림)가 있었고, 위장전입, 집단 주소 이전, 당비 대납, 대리투표 등이 계속 발생했지만 바로잡지 못했다. 지난 4·11 총선 직전 불거졌던 이정희 공동대표 측의 야권연대 경선 ‘여론조사 조작’ 사건도 민주주의에 대한 둔감한 인식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할을 해온 진보 세력들이 정작 한국사회가 이뤄낸 민주주의의 기본 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민주화 이후 다른 의견에 대한 인정과 타협, 공정한 선거 등 민주주의 규범에 맞게 스스로를 바로잡는 데 게을렀다는 것이다. 패권주의와 폐쇄성, 민주적 절차의 생략이 독재 권력의 엄혹한 탄압에 맞서기 위한 ‘필요악’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독재와의 투쟁 과정에서 독재를 닦아버린 자신들의 내면을 성찰하는 모습은 없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자신들이 진보의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이들은 타도의 대상으로 봤던 것”이라며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정말 대중 속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권주의를 양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진보정치의 신뢰 회복은 어렵다. ‘보이지 않는’ 정파 권력이 당을 휘두르는 구조를 혁파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규범과 절차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정치의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그래왔듯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정파 간 거래를 통한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이견과 갈등을 다루는 점에서 완전히 썸병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진보 전체의 문제”라면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통합진보당만 죽는 게 아니라 진보정치 전체가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치의 위기]최장집 “이념에 복무하기 위해 투쟁할 뿐, 민주주의자들은 아니다”

(경향신문, 2012년 5월 16일, 안홍욱 기자)

왜곡된 동지·조직문화가 폭력성으로 분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69·경향시민대학장·사진)는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이자 폭력”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혁명적 민족주의와 급진적 민주주의가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실패한 결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보가 완전히 재구성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와 정치에서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진보성향의 정치학자로 평생 민주주의 문제에 천착해온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노동 세력이 배제된 보수 독점의 정당체제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회집단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 지난 12일 열린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가 당권파가 주도한 폭력으로 얼룩졌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단지 당 대회(중앙위)에서의 폭력 행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이자 폭력이다. 민족자주, 민족해방과 같은 혁명적 민족주의 이념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으로 대표되는 급진적 진보파들의 이번 행동은 그들의 이념과 가치를 지고의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신념의 표현이다. 그들에게 있어 민주주의의 규범과 가치는 그들의 목표에 부응하고 복무할 때만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들은 목표 달성과 이념에 복무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지 민주주의자들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부엘리트들만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사태로 급진적 진보파들도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이 특히 뼈아프게 느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민족해방, 노동자해방과 같은 추상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이념적 언어들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시키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민중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헌신했다기보다 그들 자신의 이념과 가치, 잘못된 이상과 목표에 열정을 쏟았고, 그에 복무했고 헌신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실제의 민중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중산층 급진주의자들이었고, 정서적으로만 급진주의자들이었음을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해방 후 분단국가의 건설과 전쟁, 그리고 민족 분단의 지속과 같은 민족문제의 미해결 등 한국이라는 국가가 안고 있는 어떤 태생적 결함은 통합진보당 급진파들의 혁명적 민족주의 이념을 정당화시키는 데 역사적 자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전근대적 왕조체제, 인권탄압, 생존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의 북한 실상을 혼동하고 있다. 점점 그들은 이념의 포로가 돼 현실을 보려 하지 않게 됐다. 그 결과 가장 급진적인 진보파들이 가장 전근대적이고,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그룹이 됐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는 혁명적 민족주의와 급진적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가치, 원리, 규범에 빨리 적응해서 민주주의를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소외된 사회경제적 집단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 했어야 한다. 즉 민주화운동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전환에 실패한 결과다.”- 현재 진보정당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에서 시작해 통합진보당까지 12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진보정당의 활동을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2000년은 과거 혁명적 정조와 이념을 담지했던 그룹들이 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아니 절호의 계기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환에 실패했고, 운동 시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요컨대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대표하는 것으로 자임했던 소외된 계층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통합진보당 사태는 필연적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의 이번 사태로 진보정당이 한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은 이 사태를 풀어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급진적 진보파들의 문제가 이처럼 너무나 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민주주의의 제도와 규범에 적응하면서 그 체제 내에서 하나의 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무한정 연장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 진보는 죽었다. 진보가 완전히 재구성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와 정치에서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보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 대비해 무엇이 달라야 한다고 보는가. 또 진보정당이 매진해야 할 과제와 자세는 무엇인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익과 기존 질서를 분점하는 주류 정당이다. 진보정당이 재구성된다고 가정한다면 두 가지 지점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하나는 진보정당과 그들이 대표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회집단과 이들을 대표하려는 정당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한다. 인적 구성과 인적 성격에서 그러하고, 사회 소외세력의 의사를 그들의 이익에 더 가까이 다가가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거대 담론과 이상주의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나 슬로건을 벗어던지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책 사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책 대안과 프로그램이 소외세력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도출돼야 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려 기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보편적 복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같은 포괄적인 언어들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프로그램들을 갖춘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게 아니면) 삼가는 게 필요하다.”

[진보정치의 위기](2) 무엇이 문제인가

(경향신문, 2012년 5월 17일, 안홍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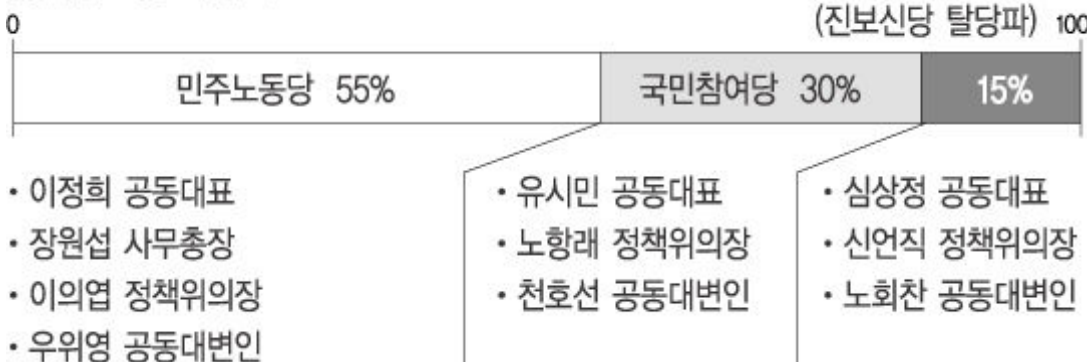
이념 다른 ‘민노참여·진보연대’의 총선 겨냥 ‘문지마 통합’ 지난해 12월5일 국회 귀빈식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가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과 당헌, 강령이 결정됐다. 이정희 공동대표 = 대한민국 정치사는 2011년 12월5일을 진보정치세력이 역사와 국민 앞에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날로 기록할 것이다. 유시민 공동대표 = 새로 만나게 된 동지들과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한국정치의 혁신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심상정 공동대표 = 현실주의자는 이상을 향해 좀 더 담대해져야 했고 이상주의자는 현실을 향해 좀 더 욕망해야 했다. 통합의 세 주체는 갈등하고 반목하던 사이였다. 그랬음에도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통합진보당이라는 깃발 아래 뭉쳤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창당한 진보정당이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의 삶과 참여정부 계승’을 내걸고 만들어졌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한 참여정부를 격하게 비난했고,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을 정치적 동지로 보기에는 어색했다. 새진보통합연대는 2008년 민주노동당 자주파(NL)의 대북관과 패권주의적 당 운영에 반발해 탈당하고 진보신당 창당을 주도한 심상정·노회찬 전 의원과 조승수 의원이 핵심 인물이다.

▲ 갈등과 반목했던 세 축가치 절충하거나 불합태생적 한계 극복 못해 통합의 세 축은 이처럼 얽히고설킨다. 이념도 노선도 같았다. 이들을 하나로 엮은 것은 공통된 이해관계다. 4개월 뒤에 실시되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통합진보당 출범을 공식화한 날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때다. 통합진보당이 하나가 되

는 과정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평등파(PD)의 탈당 이후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등 당권파가 장악한 민주노동당은 2009년 ‘2017년 집권을 위하여-집권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진보정당이 더 이상 소수정당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다수파, 주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적극 추진한 것도 통합으로 몸집을 불려야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대 때 야권 단일후보를 얻어내는 데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 있었다. 총선에서 세력을 확보한 뒤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해 공동정부의 구성으로 참여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국민참여당은 정치적 탈출구가 필요했다. 2010년 6·2 경기지사 선거에서 유시민 대표, 지난해 4·27 경남 김해를 재·보선에서 이봉수 후보가 각각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했지만 패배한 터다. 19대 총선 등을 앞두고 새로운 활로가 요구됐던 것이다. 유 대표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에게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적극적인 ‘통합 구애’를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참여당의 일부는 3자 통합이 가시화하자 이탈해 민주통합당에 합류하기도 했다. 새진보통합연대도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 등 ‘간판 인물’의 의회 진출을 위해 통합을 원했다. 이들은 “국민참여당은 연대의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국민참여당을 배제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은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건이 부결되자, 박차고 나온 뒤 국민참여당을 통합 대상으로 인정했다.

통합진보당 지분 구조



이러한 이해와 노선이 다른 세력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와 지향은 절충되거나 봉합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난해 5·31 통합 합의서에 담긴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부분은 3자 통합 합의서에는 빠졌다. 국민참여당은 5·31 합의서를 두고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파견제 철폐, 지역자립형 경제,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등 정책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질적 정책관, 노선에도 불구하고 통합한 것이다. 대북관도 통합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는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치열한 논쟁은 없었다.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통합의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에 모호하게 넘어간 것이다. NL 당권파의 패권주의 행태는 통합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시민 대표가 한동안 업무를 거부한 것도 당권파의 일방적 당 운영에 반기를 든 측면이 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당권파의 행태는 비례대표 부정 경선 대응 과정에서 극적으로 표면화됐다. 당권파 측이 주도한 지난 12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를 겪으며 유시민 대표는 “단상에서 참여당 당원들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고, 진보신당 출신들은 “한배를 타겠다고 믿었던 우리가 잘못”이라고 했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묻지마 통합’은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당 5개월여 만에 최대 위기 국면으로 내몰린 통합진보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정치의 위기] ‘진보의 재구성’ 때 풀고 가야 할 두 가지

(경향신문, 2012년 5월 18일, 황경상 기자)

① NL은 시대착오적 중복 분파일 뿐인가 통합진보당 사태를 맞아 당권파의 핵심 이념인 NL(민족해방) 노선이 집

중포화를 받고 있다. 진보좌파정치에서 이들의 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NL 노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진보정치의 재구성’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의제다. NL은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 분파일 뿐일까. 흔히 말하는 NL과 PD(민중민주)의 분열은 1980년대 중반 운동권에서 ‘한국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차이로 나왔다. NL은 해방 후 미국의 개입으로 분단이 됐고 한국이 미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됐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해방과 남북통일을 통한 자주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반면 PD 그룹은 한국을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이 모순을 해결하는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과제로 삼았다. NL이 통일운동과 학생운동을 강조한 반면, PD는 노동운동에 주력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NL의 문제의식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 결론 다르지만 분단이 극복되지 않으면 남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분단체제론’이 대표적이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인터넷 언론 ‘참세상’ 기고에서 패권주의적 행태의 반성, 공개적 정책그룹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당권파를 비판했다. 그럼에도 그는 “반제(反帝) 민족해방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NL의 정당한 문제의식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정치적 신념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수구적이라고 하면서 폐기해선 안된다”며 “생각이 달라도 합리적 핵심은 우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 역시 “그들의 문제는 사상이 아니라 비민주적인 행태와 습성”이라며 “정강·정책·노선을 드러내놓고 평가받을 자세만 돼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을 탈색시켜버린 현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NL 노선은 노동자계급, 진보좌파정당의 이념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승호 사이버노동대학 대표는 “민족 자주나 통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민주노동당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버렸듯 민족 문제만을 자기 정체성으로 지니게 되면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프티부르주아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족 개념은 노동자계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진보좌파정당의 특색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이 가능했던 것도, 이후 노동 문제에 소홀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NL이 좌파민족주의로 지금의 지분을 얻었지만, 이젠 그 이념조차 버리고 권력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진보신당 기관지에서 “민족주의의 긍정성이라면 반제 의식이지만, 통합진보당 인사들에게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자는) 미국의 속국 남한의 애국자인 유시민씨가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② ‘자유주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지난해 한 보수언론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한국정치학회 발표 논문을 대서특필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민주주의’(진보)나 ‘자유민주주의’(보수)냐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을 즈음 진보진영의 대표적 학자인 최 교수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논문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교수가 말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로 생각하는 ‘반공주의’나 ‘자유시장주의’와는 스펙트럼이 달랐다는 점에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그의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이며 만민평등의 이념이고, 약자와 소외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가치에 방점을 찍는다면 한국의 현실에선 “진보에 가까운” 이념이었다. “자유주의도 진보적일 수 있다”는 최 교수의 주장은 통합진보당을 만들 당시 진보신당 독자파를 포함한 진보진영 일각에서 쏟아진 비판과 무관치 않다. 민주노동당과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라는 노동자 정당 세력이 흔히 부르주아 정치 성향으로 불리는 ‘자유주의’의 국민참여당과 결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문제의식이다. 이는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새롭게 진보좌파 정치세력을 만들어가는 데도 계속 논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증견학자가 지난해 출간한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폴리테이아)에는 신자유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평등의 이념으로 자유주의를 해석한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유주의를 불러올 이유는 있다. 노동정치만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없으며, 결국 중간계층은 물론 심지어 대기업들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가 더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통합진보당 출범을 향한 통합이 진행될 당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세 세력의 통합이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공통의 기반을 매개고리로 삼은 것을 볼 때 그것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은 복지국가 지향의 진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도 “노동자와 시민을 구분하면서 진보정치를 노동과만 연결시키지 말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적 이념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유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진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프레시안에서 장 교수와 논쟁을 벌였던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복지국가의 진보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유시민씨가 대표인 국

민참여당은 민주당보다 복지, 사회정책에서 오른쪽에 있고 통상정책은 더더욱 그렇다”고 반박했다. 차라리 소통 합을 할 바에야 민주당을 포함한 대통합으로 가야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손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울산·창원 지역 총선 패배가 보여주듯 국민참여당에 대한 반발은 이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과거 참여정부에서의 반노동 정책)도 있다”며 “자유주의를 수렴하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필요성으로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도 “복지담론은 누구나 동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내놓으면 되고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다”며 “복지국가 건설 중심으로만 전선을 만들어가게 되면 노동자 정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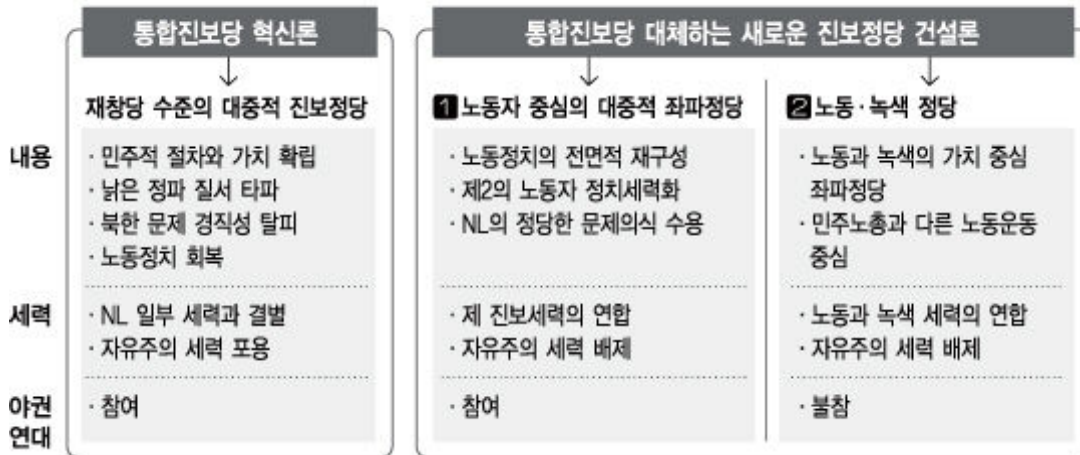
[진보정치의 위기](3) 진보정치의 재구성

(경향신문, 2012년 5월 18일, 김진우 기자)

‘고쳐 쓰자’는 혁신론, ‘새로 짓자’는 건설론 갈림길에진보정치의 재구성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통합진보당 사태가 불러일으킨 ‘진보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바닥까지 추락한 진보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진보정치의 ‘새판’을 짜야 한다는 요구들이 ‘진보정치 재구성’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그 진보정치 재구성의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답게 개조해야 한다는 혁신론과 통합진보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론이다. 통합진보당 혁신론은 “낡은 진보를 무덤으로 보내고 미래형 진보를 세우기”(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위해 재창당에 가까운 전면적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취지다. 일차적으로는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과 중앙위원회 폭행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낡은 정파 질서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

▲ 세력화 주체·핵심 가치 등제도적 방향 의견차 뚜렷일부 ‘노동·녹색 정당’ 논의도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파등록제 같은 제도적 방안으로는 안된다. 새롭게 헤쳐 모이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국민 상식과 안 맞는 세력과의 결별도 각오하지 않으면 내부 쇄신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념 경직성과 폐쇄적 소통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 당을 현대화하는 것도 혁신을 위한 과제로 제기된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양한 대중에 참여해야 대중정당으로서 기반이 넓어진다”며 “이질적인 것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계속 자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입장은 통합진보당에 가입해 구태를 청산하고 혁신을 이루자는 ‘진보 시즌2’ 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이번 사태의 와중에 이미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당, 젊고 대안을 내놓는 정당으로 가는 데 일조하겠다”며 입당했다. 비례대표 14번을 받은 서기호 전 판사도 “미래형 진보는 정치·정파 논리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갖춘 국민의 눈높이로 하는 진보정치”라며 힘을 보태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위해선 보다 근원적으로 진보정당으로서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진보적 가치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혁신의 초점이 절차적 민주주의에만 맞춰질 경우 진정한 진보정당 건설은 요원하다는 인식에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노동 없는 진보정치’의 극복이 손꼽힌다. 김윤철 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만 갖춘다고 국민이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 양극화 문제 등 국민 상식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과 이념,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사회 소외세력을 더 가까이 다가가 대표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통합진보당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이뤄낸 뒤 ‘진보대통합’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민주적 절차와 가치에 대한 존중, 진보정당의 현대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진보대통합의 계획”을 진보 재구성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보정치 재구성 시나리오



통합진보당 혁신론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자유주의 정당으로의 ‘우경화’가 진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중심 진보정당으로의 개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진보대통합’ 주장에 대해서도 자유주의 세력을 포괄한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갈라진 진보세력들의 물리적·화학적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 내용이 분당으로 치달을 경우 ‘진보의 재구성’은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진보당 혁신론과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론이다. 통합진보당에 진보정치의 미래를 걸 수 없는 만큼 ‘실종’된 노동정치와 진보정치를 복원할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주장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체성을 띠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진보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진보교연)의 김세균 서울대 교수가 노동자 대중을 주축으로 한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론을 주창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10일 진보교연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선을 긋고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에 찬성하는 제 진보정치세력이 연합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민주노총 주도하에 이뤄진 ‘위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통합진보당 사태로 최종적으로 파탄했음을 인정하고, 민주노총의 틀에 들지 않는 노동운동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기초한다. 김 교수는 특히 통합진보당 외부에서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해 통합진보당 인사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주해방(NL) 세력의 문제의식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는 다르게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건설의 목표를 ‘노동·녹색 정당’에 뒀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주로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창당과 야권연대 과정에서 ‘진보’의 가치를 상당 부분 잃은 만큼 ‘노동’과 ‘녹색’(환경)을 두 축으로 좌파 정치지형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들은 특히 자유주의 세력은 물론 통합진보당과 이를 지지하는 민주노총 상층부의 흐름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민주통합당 중심의 연립정부를 전략적 목표로 삼아 진보좌파의 이념과 노선, 정책을 종속시키려는 경향에도 반대한다. 통합진보당의 길과는 다른 진보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는 “통합진보당이 분당을 하든 야권연대를 하든 진보적 내용이 약화되는 것”이라며 “미력하게나마 새로운 진보정당이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자리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론은 과거 진보정치의 위기나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진보세력 내부의 의견차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전도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신당권파 출연과 그 이후

변혁과 진보(77)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서프라이즈/2012.5.17

그들은 '퇴출의 덫'에 걸렸다

수구언론에서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신당권파와 구당원파라는 신조어다. 당권파라는 말만 쓰다가, 신당권파와 구당권파를 구분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조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진보당의 당권이 교체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당권교체란 진보당의 당권이 구당권파에서 신당권파로 넘어간 것을 뜻한다.

물론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당내분쟁이 끝난 게 아니므로, 당권이 구당권파에서 신당권파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신당권파가 자기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사실상 당권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진보당을 위태롭게 만든 파국적 사태의 원인은 당권교체문제를 놓고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충돌한 당내분쟁이다. 당내분쟁이 극도로 격화되어 파국적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진보당의 파국적 사태를 도덕적인 정파와 부도덕한 정파가 비례대표 경선부정이라는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 보는 도덕적 견해도 있으나, 파국적 사태에 개입된 '도덕문제'는 파국적 사태의 촉발계기에 지나지 않으며, 파국적 사태의 발생원인은 어디까지나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분쟁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도덕적 관점은 당내분쟁의 촉발계기와 발생원인을 혼동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신당권파와 구당권파라는 신조어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15일, 수구언론 논설위원 한 사람이 발표한 논설에 들어있는 글귀가 유난히 눈길을 사로잡는다. "경기동부는 유 씨가 쳐놓은 덫에 걸렸다.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인용문에서 말하는 '경기동부'란 구당권파를 뜻하고, '유 씨'란 신당권파를 이끄는 핵심인물인 유시민 씨를 뜻한다.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신조어를 그 인용문에 대입하여 다시 읽으면, "구당권파는 신당권파가 놓은 덫에 걸렸다. 당권을 신당권파에게 빼앗긴 구당권파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진보와 변혁의 정적들인 수구우파는 진보당이 겪는 파국적 사태를 이처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당권파가 놓았고, 구당권파가 걸려든 덫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두 말할 나위 없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진상조사가 바로 그 덫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신당권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하면서 필쩍 필쩍 모른다.

그러나 진보당 당권교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신당권파가 진상조사라는 덫을 놓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진상조사방향에서 편파성이 보이고, 그에 따라 진상조사결과에서도 불공정성이 보이고, 진상조사결과를 수구언론에 공개한 절차와 방식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구당권파를 당지도부에서 퇴출시키려는 신당권파의 당권교체 의도가 진상조사 및 진상조사결과 공개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경선부정 진상조사는 구당권파에게 '퇴출의 덫'이 아닐 수 없다.

너무도 위압적인 선동의 소용돌이

신당권파가 구당권파를 당지도부에서 퇴출시키고 당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첫 공정은 폭로전이었다. 이를테면, '비례대표 경선부정 = 구당권파의 파렴치한 범행'이라는 범죄수사공식이 당 안팎의 강력한 폭로선동을 타고 확산되자, 구당권파는 하루 아침에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혔다.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힌 구당권파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저 참는 수밖에 없고, 진보당 당권을 신당권파에게 넘기고

당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퇴출선동이 압도적이었다. 평소에 '진보의 언어'를 곧잘 구사해가며 진보인사를 자처하던 사람들도 예외없이 폭로선동과 퇴출선동에 동조하는 하급선동원 역할에 충실하였다.

당 안에서는 신당권파가, 당 밖에서는 수구우파가 별떼처럼 들고일어났다는 점에서, 그들의 선동은 너무 위압적이었다. 그들의 선동에 어떤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제3자마저도 구당권파의 '파렴치한 범행'을 묵인하고 '파렴치범'을 두둔하는 혐의자로 비난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구당권파를 무조건 두둔하는 행위와 구당권파에 대한 부당한 선동공세를 비판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것인데도, 이들의 선동공세는 그 두 행위를 구분하는 경계마저 무너뜨렸다. 당내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제3자의 시야는 실종되고, "그러면 당신은 구당권파냐 아니면 신당권파냐" 하는 정파적 신원확인절차만 당 안팎에서 강제되었다.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감정분출만 극도로 격화되더니만 급기야 폭력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신당권파의 당권교체 강행에 격노한 구당권파의 일부 몰지각한 당원들이 회의장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당권파 핵심인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퇴출의 멧에 걸린 구당권파를 더욱 옥죄는 자해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

진보당의 파국적 사태를 처음부터 되짚어보면, 구당권파는 신당권파가 경선부정 진상조사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진상조사의 창끝이 나중에 자기들을 겨누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신당권파가 구당권파를 당지도부에서 밀어내기 위한 퇴출의 멧이 진상조사과정에 설치되고 있었는데도, 그런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심하던 구당권파는 퇴출의 멧을 피할 수 없었다. 다급해진 구당권파는 공정회를 열어 퇴출의 멧에서 빠져나오려고 모질음을 썼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당 안에서는 신당권파가, 당 밖에서는 수구우파가 이미 멧에 걸린 구당권파에게 완전한 굴복을 강요하는 총공세를 집중하였다.

진보당의 당권교체가 당원들의 민주적 선출과정을 통해 순리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신당권파의 강행처리와 그에 따른 신당권파와 구당권파의 물리적 충돌로 무리하게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진보당이 파국적 사태로 입은 내상은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도 당의 화합을 바라는 목소리가 미세하게나마 들리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심한 내상의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파국적 사태 몰고온 당내분쟁의 본질

당연한 말이지만,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당내분쟁이 급속도로 격화되어 폭발한 이번 파국적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당 안팎에서 벌어진 폭로선동과 퇴출선동이 너무 위압적이어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지만,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파국적 사태를 몰고온 당내분쟁의 본질은, 구당권파를 '파렴치범'으로 낙인찍은 당 안팎의 무수한 선동가들이 일제히 목청을 높인 '도덕문제'가 아니다. 당내분쟁의 본질은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정치문제다. 도덕적 관점을 접고 정치적 관점을 세워야 당내분쟁의 본질이 시야에 들어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당권파와 신당권파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이념문제를 당내분쟁의 본질로 규정할 수 있다.

진보당의 정치이념구도를 살펴보면, 구당권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주파이고, 신당권파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유파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민파의 정파연합이다.

다시 말해서,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충돌은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자주파와 중도우파연합의 충돌인 것이다.

자주파와 중도우파연합의 격돌을 바라보는 당 밖의 시선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수구우파언론의 보도기사에서 당 밖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이 들린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정치권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주사파를 확실히 정리한 것 아닌가"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취재기자는 "당권파를 진보진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어떤 대학교수는 "이번 기회에 비당권파들이 순수 진보세력 중심으로 진보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인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진보당 밖에 있는 수구우파와 중도우파는 진보당의 자주파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여 퇴출시켜야 한다느니, "진보진영으로부터 분리"하여 고립시켜야 한다느니, 당지도부에서 퇴출시키고 중도우파연합을 중심으로 진보당을 재창당해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유파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민파가 손잡은 중도우파연합 신당권파가 자주

파가 주도하는 진보당을 자기들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변질시키려는 것, 바로 이것이 파국적 사태를 몰고온 당내분쟁의 본질이다.

구성비율과 표결결과는 왜 일치하지 않았을까?

951명으로 이루어진 진보당 중앙위원회의 구성면모를 보면, 민주노동당계 523명, 국민참여당계 285명, 새진보통합연대계 143명이다. 따라서 당지도부 구성비율은 자주파가 55%이고 중도우파연합이 45%다.

그런데 중앙위원회 구성비율에서 45%밖에 차지하지 못한 중도우파연합이 어떻게 55%나 차지한 자주파를 퇴출의 뗏에 걸리게 만들었을까?

이번 파국적 사태 중에 있었던 진보당 중앙위원회 표결결과가 숨겨진 사실을 말해준다. 중앙위원 545명이 참가하고 367명이 불참한 중앙위원회 표결결과를 보면, '당혁신 결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찬성 541표, 반대 4표였고, '혁신비대위 구성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찬성 536표, 반대 9표였다.

중앙위원회 표결 자체를 반대하여 표결에 불참한 367명과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 또는 9명이 자주파에 속했거나 자주파에 동조하는 중앙위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을 자주파로 통칭한다면,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자주파 비율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중앙위원회 구성에서 자주파 비율은 55%(523명)인데,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자주파 비율은 40%(371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이다. 이것은 자주파 중앙위원들 가운데 약 150명 정도(15%)가 표결과정에서 중도우파연합과 공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원래 45%를 차지한 중도우파연합은 자주파 중앙위원 약 15%가 그들과 공조하는 바람에 60%로 불어난 반면, 원래 60%를 차지한 자주파는 자주파 중앙위원 약 15%가 중도우파연합과 공조하는 바람에 45%로 줄어들었다.

자주파 중앙위원들 가운데 약 15%가 중도우파연합과 공조한 것은, 중도우파연합이 중앙위원회 표결처리로 당권을 교체하도록 길을 터준 결정적 요인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주파는 단일대오가 아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자주파는 다수계와 소수계로 구분된다. 자주파 다수계를 시중에서는 '당권파' 또는 '경기동부'라고 부르고, 소수파는 그들을 이른바 '중북주사파'로 비방증상한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자주파 소수계는 자주파 다수계가 '패권주의(Hegemonism)'를 부린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중도우파연합이 자주파 다수계를 상대로 공세적인 당권교체를 밀고나갈 때, 자주파 소수계가 그 공세에 가세하였다. '패권주의(Hegemonism)'를 부리는 자주파 다수계에 대한 반감이 자주파 소수계를 중도우파연합과 공조하는 길로 떠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55 대 45의 구성비율이 40 대 60의 표결결과로 뒤바뀐 사연이다.

자주파 다수계(40%)는 자주파 소수계(15%)와 중도우파연합(45%)가 밀어붙인 강행처리협공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처럼 자주파 소수계의 공조를 획득한 중도우파연합은 자주파 다수계를 당지도부에서 몰아내고 당권교체를 실현하였다. 중도우파연합이 주도하고, 자주파 소수계가 공조하고, 자주파 다수계가 거부한 가운데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바로 그런 당권교체의 일차적 결과물이다.

앞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어질 당권교체과정에서 중도우파연합은 자기들과 공조한 자주파 소수계와 당권을 나누겠지만, 자주파 소수계가 차지할 '몫'은 25% 이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진보당 당권의 75%를 중도우파연합이 차지하고 자주파 소수계는 나머지 25%만 차지할 것임을 예고한다.

물론 당지도부 구성에 관한 이러한 예상은, 중도우파연합과 자주파 소수계가 공조하여 자주파 다수계를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자주파 다수계가 당지도부 구성에 전면 불참하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주파 다수계가 중도우파연합과 자주파 소수계의 공조에 밀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은 아니다. 자주파 다수계는 중도우파연합이 강행하는 당권교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에 따라 당내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새로운 국면의 당내분쟁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인은 진보당 당원들의 향배다. 어느 정파가 당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가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적 문제가 당내분쟁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체성 변질부터 막아야 한다

진보당 앞날을 사회변혁적 관점에서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당면한 당권교체문제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중도우파연합의 당권교체강행에 공조한 자주파 소수계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당권을 중도우파연합과 나누어 갖는다 해도 세가 너무 약해 중도우파연합의 독주를 견제하지도 못할 것이며, 견인하는 것은 더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진보당이 중도우파연합이 이끄는 중도우파정당으로 탈바꿈할 위험이 매우 커졌음을 예고해준다.

진보당 소속 중도우파연합과 민주통합당은 당적만 서로 다를 뿐이고 정치이념은 똑같으므로, 진보당이 중도우파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민주통합당에 대한 진보당의 전략적 차별성이 사라지는 변질이며,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진보당이 '민주통합당 2중대'로 전략하는 굴욕이다.

자주파 다수계는 자주파 소수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도우파연합과 손잡고 진보당을 건설하였지만, 그들이 중도우파정당을 건설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자주파는 중도우파연합과 손잡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든든한 전략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진보당을 건설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건설한 진보당이 이제 와서 '민주통합당 2중대'로 전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사회변혁적 관점에서 보면, 당권교체를 실현한 중도우파연합의 의도가 진보당을 중도우파정당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진보당의 우경화가 혁신이 아니라 변질이라는 것은 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진보당의 정체성 변질이야말로 진보정치의 포기이며 사회변혁의 대의에 대한 배반이 아닌가!

진보와 변혁의 긴급한 당면임무가 제기되었다. 진보당의 우경화를 막고 진보당의 창당정신과 진보적 정체성을 옹호고수하는 것은 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들에게 주어진 중대하고 비상한 임무다.

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라면 다수계와 소수계를 가릴 것 없이, 진보당의 정체성 변질을 막고 우경화를 저지하는 당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2012년 5월 17일 작성)

3. [긴급 기고] 통합진보당 와해시키려는 4단계 시나리오

'적출→와해→파탄→재집권'로 이어지는 수구우파정권의 음모

〈민중의 소리〉 2012-05-22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적출→와해→파탄→재집권 4단계 시나리오

통합진보당에 몰아닥친 내분과 외압이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통합진보당 인사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당원명부를 압수한 것이다.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야당을 물리적으로 탄압하였던 사법적 폭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사법당국이 통합진보당에게 자행한 사법적 폭거는,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 수구우파정권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통합진보당 사태가 구당권파 대 신당권파의 분쟁구도를 넘어 통합진보당 대 이명박 정권의 대립구도로 전화,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수구우파언론은 마녀사냥식 음해모략으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를 도려내려는 이른바 '적출공작'을 밀어붙였다. 수구우파언론의 '적출공작'은 통합진보당이 애써 구축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수구우파정권의 사법당국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 개입할 길을 터주었다. 통합진보당에게 자행된 사법적 폭거에 대해 대중들은 공분을 느끼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명백하게도, 수구우파정권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 직접 개입한 목적은 통합진보당을 와해시키는 데 있다. 수구우파언론의 구당권파 적출공작이 이제부터는 수구우파정권의 통합진보당 와해공작으로 증폭,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구우파정권이 통합진보당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를 파탄시키기 위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내분과 외압의 합병증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분당하거나, 또는 와해 직전의 극심한 혼란과 무력한 상태에 빠져들면 야권연대가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수구우파정권이 야권연대를 파탄시켜야 올해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막고 자기들의 재집권을 실현할 수 있는데, 야권연대를 파탄시키는 방도는 야권연대를 떠밀고 나가는 구동축 한 쪽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수구우파언론의 구당권파 적출공작→수구우파정권의 통합진보당 와해공작→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 파탄→수구우파정권의 재집권으로 이어지는 4단계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4단계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표기하면, 적출→와해→파탄→재집권이다.

수구우파언론의 악의적 대중선동에 휘말려 구당권파에게 무모한 돌팔매질이나 할 게 아니라, 수구우파정권의 재집권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 날로 악화되는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적 측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선무당들이 펼쳐놓은 궤판

미국식 저질영화의 총본산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는 때로 단역배우(extra)들이 모여드는 적이 있다. 그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영화촬영에 동원되는데, 영화감독은 단역배우들에게 시나리오를 말해주지 않으며, 단역배우들도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영화를 촬영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다. 단역배우들은 촬영장면 한 부

분에 잠깐 동원되는 것이 전부다.

그런 영화촬영에 비유하면, 통합진보당 와해공작 시나리오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치는 악당 주역을 수구우파정권이 맡고, 구당권파를 해치는 악당 조역을 수구우파언론이 맡았다고 말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와해공작 시나리오를 총연출하는 영화감독의 정체를 알아내기 힘들지만, 촬영현장에 동원된 단역배우들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통합진보당 와해공작 시나리오가 가동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역배우들이다. 이를테면, 당내경선 부정의혹을 구실로 구당권파를 밀어내고 당지도부를 장악하려는 신당권파가 그런 단역배우들이고, 같은 자주파이면서도 당권관계의 이해득실에 따라 구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운 당내 자주파 일부가 그런 단역배우들이고, ‘자주파 혐오증’에 걸린 듯한 일부 지식인들 및 재야인사들이 그런 단역배우들이다.

예술적 기량이 없는 단역배우들이 단역밖에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통합진보당 와해공작 시나리오를 간파할 만한 정치적 식견이 없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도 그 시나리오의 연출에 무분별하게 부화뇌동하였다. 통합진보당 와해공작 시나리오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촬영장면에 덜컥 출연해버린 단역배우들의 부화뇌동은 영화촬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야말로 수구우파의 대중선동을 촉발시키거나 대중선동에 부화뇌동하며 통합진보당을 잡는 선무당 노릇을 톡톡히 하였다. 선무당 굶판은 이제 그만 걷고, 수구우파의 악질선동과 정치탄압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4. 통합 진보당 사태의 전모

카맥
서프라이즈
2012.5.30

나는 진보당의 평당원으로서 그동안 이쪽 저쪽에 얽매임 없이 활동해 왔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당도 내손으로 가입했고, 소위 당권파측 인사들과도 교분을 나누었고, 통합 이후에는 참여당측 인사들과도 교분을 나누었다. 이번 총선 전후 '경기동부'논란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중앙위 사태까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 여러 구 당권파측, 신 당권파측 인사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 나름 정확한 인식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글을 쓰면 당연히 너도 당권파냐? 하겠지만 굳이 본인에 대해 나름 정의를 내린다면 친 당권파 사람 정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내 나름 많은 생각과 대화 속에 얻은 결론은 이번 사태는 당권장악에 눈이 먼 신 당권파의 물불 안 가리는 권모술수와 자주파에 대한 히스테리적 경멸의식을 가지고 이들과 철저히 동맹을 맺은 일부 진보 언론, 이 기회에 진보당을 쪼개 대신 승리의 썰기를 박으려는 보수세력, 보수언론의 요구와 의도가 절묘하게 결합된 결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장장 한달 가까이, 그것도 소외받는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는 진보당 내부의 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설명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자, 진보당 내의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우기 위해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총동원되어 당내 분란 상황을 1면 톱으로, 그것도 한 달 가까이 올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언론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나?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탄핵이 더 큰 사안인지, 아니면 13석짜리 진보당 당내 분란이 더 큰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신당권파의 패악질도 큰 역할을 했지만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수구 보수 세력의 준동이다. 예전부터 봐왔지만 이들은 심상정, 노회찬등을 비롯해 노동운동내 좌파그룹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세력이 좀 더 커서 자주파 진영과 갈등과 대립이 더 격화되기를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 보수세력과 정권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주파의 정치적 진출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국회등에 떼거지로 몰려오는 상황이라면... 이들에게엔 악몽같은 일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6.15 선언, 평화협정, 미군철수, 한미FTA등 하나같이 수구 보수세력의 존립근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국회라는 헌법기관, 정치무대에서 제기하고 싸우려 들 터이니 말이다. 더군다나 좌파들은 하지 못하지만 자주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야권연대다. 굳이 자주파의 통일전선 이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진보당 내에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유시민이 할 수 있나? 심상정이, 노회찬이 할 수 있나? 야권연대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있었지만 어쨌든 야권연대의 주역은 당내 자주파였다. 이정희 대표가 자주파를 대변하는 사람이거나 그들의 아바타라는 말은 듣기에도 좀 졸렬하고 유치한 공격이지만 이정희 대표가 당내 자주파와 같은 노선을 걸어왔던 것 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자주파와 같은 노선을 가지고 이정희 대표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총선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냈다. 야권연대를 비롯해 진보 통합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 앞에 놓인 역사적 대업을 다 이루어 놓고도 이렇게 어이없게 퇴장을 당하는 것을 보며 그를 지지하는 한 개인으로서 가슴이 미어진다.

야권연대의 주역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진보당내 구 당권파이고 자주파였다. 그래서 수구 보수세력 입장에서는 이들을 박살내면 야권연대 자체도 파괴할 수 있고, 야권연대를 파괴하면 정권 재창출의 8부능선은 넘는 것이니 신 당권파들의 분탕질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던 것이다. 지난 10여 년 간 자신들과 경찰, 검찰, 국정원이 못하던 일을 신 당권파가 해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는가? 수구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이 모든 과녁을 당권파-자주파에 집중하

고 공격을 퍼부어 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준호 말대로 총체적 부실, 부정이면 다 같이 부실, 부정 했다는 것인데, 조중동이 단 한번이라도 이석기-김재연 말고 타 당선자나 후보를 공격하는 것을 본적이 있나?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조중동과 이에 부화뇌동한 기타 언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당권파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 당권파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골라 하나씩 터뜨려 주며, 당권파-자주파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것을 표정관리 해 가며 즐기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사실 이번 선거 문제는 어느 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이런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서는 절대 진실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글에서는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은 생략할 생각이다. 이미 이정희 대표가 공청회를 통해 조목 조목 반박했기 때문에 구태여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본인이 당 내외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분석하여 이사태의 원인과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할 뿐이다. 참고로 언론에서 말하는 구 당권파니 신 당권파하는 구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 당 대표단, 운영위, 중앙위등 당의 각종 의결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쪽이 당권파인데도 언론은 이를 거꾸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경기동부, 울산, 인천등의 표현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해산된 조직의 이름을 통해 사람을 규정짓는 것은 해당 조직에서 활동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겐 실례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선에서 달리 쓸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해 실례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자 한다.

1. 무력화된 중앙 선관위

돌이켜 보면 당 선관위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큰 잡음 없이 선거를 치러냈다. 조준호가 의도적인 부풀리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 문제가 된 투표소는 전국 218개 투표소중 채 10개도 되지 않았다.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숫자놀음을 통해 엄청난 뺨튀기를 해서 그렇지 부정사례도 전체로 보자면 채 2%도 되지 않는 정도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비례 선거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위원회가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상근자 한명이 총선도 치루고, 정당 선거사무소 일도 하고, 비례 선거관리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역위원회 선관위가 없는 곳도 태반이었고, 있다 해도 상근직이 아닌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 부실, 부정 사례가 있었지만 비교적 큰 잡음 없이 선거를 치러낸 것이다. 그런데 조준호의 기자회견 후 선관위의 무능을 질타하는 비난이 쏟아졌다. 각 후보 진영조차도 지역위 투표구에 투,개표 참관인을 파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선관위가 무슨 용쓰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위원회 상근자들이 선거를 담당하지 않고서는 선거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된 투표함은 대부분 무효처리를 시켰다. 진상조사 보고서에 부정선거 사례라고 나오는 문제의 투표함이나 표들은 이미 무효처리가 된 것들이었다.

당시 당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당 선관위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식의 공격이다. 당 선관위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 선관위를 쥐고 흔들며 이를 무력화 시킨 조준호, 유시민이 문제였다.

당시 현장투표에서 가장 부정표가 많았던 것은 윤금순 후보측이었다. 예를 들어 경북 어디에서는 유권자 176(?)명에 윤금순 176표가 나왔다. 그런데 선거사무원 서명과 투표자 서명이 전체로 똑같은....한마디로 선거사무원이 자기 혼자서 유권자, 선관위 싸인 다 하고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은 것이다. 복치고 장구치고 창까지 혼자 다 한 것이다.

오육만 측에서 온라인에서 이기고도 현장투표에서 저서 순위가 9번으로 밀려나게 되자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때 이영희측과 노항래측간에 거제 투표함을 두고도 문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문제의 투표함 전체를 원칙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준호가 나서서 자신이 유시민과 만나 정리할 테니 이정희 대표는 빠져있으라 주장했

다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된 것이 이영희 8번, 노항래 10번이었으며, 무효처리기준 완화를 통한 윤금순 1번 확정이었다. 물론 과정에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노총 인사들의 당에 대한 협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박상철과 이영희는 현대자동차 실노회 시절부터 같은 조직에서 활동해온 사이이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조준호 유시민이 나서서 월권행위를 통해 결과를 뒤엎은 것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잉태할 것으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굽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대표단의 의견 앞에 굴복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원래 참여당 쪽은 선거판세상 오옥만, 노항래 둘 다 당선시키기 만만찮은 상황에서 선거막판 그래도 당선가능성이 높은 오옥만 쪽에 힘을 집중했었다. 그런데 까고보니 노항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1,000표 가까이 더 나왔고, 현장투표에서 밀린 오옥만은 9번으로 미끄러진 것이다. 유시민, 권태홍등 참여당 지도급 인사들의 당원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노항래는 대세에는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이순간도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였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유시민은 선관위를 무시하면서까지 왜 이런 황당한 판단을 했을까? 참여당쪽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유시민은 실제 비례10번까지는 당선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어차피 당선될 텐데 순위변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오옥만측의 요구대로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당선 될 마당에 충분히 무마가 가능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꼬였다. 바로 은평을 천호선, 안산 단원갑 조성찬의 낙선이였다. 자기들이 지원한 비례도 모조리 낙선하고, 지역에서 당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사들마저 모조리 낙선한 상황에서(전북 남원의 강동원은 당선될 것으로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참여당 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 참여당쪽 인사들의 전언이다) 유시민을 비롯한 참여당쪽 인사들의 박탈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들의 박탈감은 총선이후 당 계서판에서부터 '경기동부'척결이라는 것으로 해소의 출구를 찾기 시작했고, 급기야 비례선거 진상조사과정에서 비례선거 전체를 부정으로 몰아 구 당권파를 제거하고 당권을 장악하자는 악마의 유혹앞에 자기영혼을 파는데 까지 나아간 것이다.

2. 교활한 언론 플레이어 이청호

당내 선거문제가 한국 정치전반을 뒤흔들 정도의 사안으로 확장 된 데는 누가 뭐래도 이청호의 역할이 컸다. 이청호는 정확히 보자면 유시민의 대변인 역할 뿐만 아니라 언론플레이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냈다.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이청호의 폭로(?)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자주파에 히스테리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옛 좌파 출신의 진보언론 기자들(프레시안의 여정민이 대표적인 경우), 진중권류의 인간들에게는 경기동부 척결이라는 게거품을 물게 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이청호가 유시민등 참여당쪽 지도부와 아무런 교감 없이 활동했다고 생각하면 그것같이 바보스러운 것이 없을 것이다.

이청호의 언론플레이의 압권은 이정희 대표 공청회이후 더 어마어마한 부정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하이에나로 변한 언론의 관심을 묶어 두려는 언론 플레이와, CNP금영재 대표와의 의도적인 전화통화와 이에 대한 언론 공개였다. 전자는 그렇다 쳐도 후자의 경우는 정말 교묘하다 못해 교활하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이다. 당권파=종북=부정선거 주범=실세 이석기라는 등식이 만들어지고 있던 무렵, 이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기 위해 이석기가 당신들에게 어떤 존재냐 하는 질문을 통해 '이석기 당선자는 참여당으로 치면 유시민같은 존재'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고 이를 기민하게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 필자가 들은 바로는 CNP직원들은 자기회사의 창립자인 이석기 당선자를 실제 존경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청호는 이를 교묘히 바꿔 CNP가 아닌 구 당권파의 숨은 실세로 이석기 당선자를 내세운 것이다. 이석기 당선자가 CNP를 창립하고 각종 선거 컨설팅을 하며 참여당과의 통합이나 야권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을 해 온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석기 당선자는

이청호와 보수, 진보 언론에 의해 구 당권파의 숨은 실세로 격상된 것이다. 이는 당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경기동부'논란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되자 '민혁당 잔존세력'이 당을 실제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렇게 미끼를 던져 놓으면 보수언론이 알아서 파헤쳐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당권파=부정선거주범=종북파=이석기 실세라는 등식을 만들 수 있고, 고로 당 혁신을 위해서는 이석기 사퇴와 종북파인 당권파 제거라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청호의 언론플레이는 주효했다. 아니 주효했다기 보다는 보수세력, 조중동과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했다. 신 당권파들이 이석기 당선자를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무슨 개인적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치적 제거를 위해 이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이석기 당선자를 놔두고서는 구 당권파제거의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당권에 눈이 뒤집힌 조준호

조준호가 그동안 얼마나 당내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우기 위한 신념과 열망으로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5월2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이후 그가 보여 온 행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일관해 왔다.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정확히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당은 부정과 폐권으로 얼룩진 당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기위해 기를 쓰고 달려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발표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일관되게 구 당권파를 공격하기 위한데 집중되었다. 문제는 그가 벌인 행동이 구 당권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서 이제는 수습하기조차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당을 완전 궤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데 있다. 어떤 것에 눈이 뒤집혀 사리분별을 상실하지 않고서야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당을 궤멸시키는 짓을 서슴없이 벌일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신 당권파측에서 말하는 대로 조준호가 저지른 이 어마어마한 행동이 정말 당내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우기 위한 신념 때문이었을까?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조준호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조준호의 이런 상식이하의 행동은 그에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 이해관계에 조준호의 눈이 뒤집혀 당이 궤멸되는 것에도 개의치 않고 것처럼 무모한 행동을 벌인 것이다. 그럼 그 이해관계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평소에 것처럼 원하던 '당권' 즉 당대표 자리였다.

원래 조준호를 스카우트 한 것은 이정희 대표였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을 고려한 처사였다. 조준호는 당대표를 시켜만 주면 일단 열심히 할 것이라며 충실히 복무 하겠다고 다짐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대표에 오르자마자 마음속 깊이 자리하던 당권장악 욕심이 발동한 것이다. 당 공동대표에 오르고 난 뒤 공공연히 차기 당대표를 하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내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이후에는 문경식 후보에게 최고위원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한다. 능력은 없어도 야심만큼은 대단한 조준호 였다. 지금 조준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또 다른 야심가가 나서고 있다. 현장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명령만 내리면 80만 조합원이 파업에 나설 거라 착각하고 있는 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당직, 공직 진출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 자기가 지침만 내리면 민주노총 출신 당원들이 우르르 탈당하여 새 당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민주노총 판 개그계의 기린아 김영훈 위원장이다.

조준호는 당대표단 회의에서 진상조사위를 자신이 맡고 싶다, 다만 전권을 달라 주장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정희 대표는 조준호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지 조준호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조준호의 야심을 알아채고 조준호에게 사탕발림을 통해 쿠데타 모의에 동참하도록 유도한 쿠데타 주도세력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신 당권파들의 쿠데타 모의는 총선 이후 교감을 거쳐 진상조사 기간 동안에 본격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조준호의 바램대로 그에게 차기 당권을 약속하는 대신 조준호로 하여금 부정선거 폭로(?)의 총대를 메게 하였다. 그래서 조준호가 차기대표 약속을 받아내고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4월29일 부산에서 급거 상경한 이정희 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조준호의 구두보고를 통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뒤 사전에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대표단 토론을 거쳐 5월4일 경 발표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조준호는 이정희 대표의 주장을 물리치고 5월2일 일방적으로 부랴부랴 구체적 자료도 없이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만다. 기자들 앞에 나가 한껏 멋을 부리며 전략기획실 쿠데타 주모자들이 짜준 각본대로 발표를 했지만 자료를 기자회견 내용에 짜 맞추는 결정적 실수를 범한 것이다.

5월2일 기자회견 이후 당 전략 기획실 모임에서 조준호를 차기 관리형 당대표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정성희가 발의하고 권태홍이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당 전략 기획실 내 신 당권파 모임이 바로 이번 쿠데타의 총 본산이었다.

여기까지는 조준호의 바램대로 되어가는 듯 싶었다. 그런데 조준호의 용꿈은 그 뒤부터 깨지게 된다.

조준호는 폭로기자회견을 통해 신 당권파측으로부터 일약 당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우뚝 섰지만, 제대로 준비 안 된 그는 공청회를 통한 이정희 대표의 날카로운 반격과 구 당권파 측의 격한 반발 속에 휘청대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 당권파 측에서는 기왕 조준호가 총대를 맨 거 모든 악역을 조준호에게 맞기고 나중에 버리는 카드를 선택하게 된다. 조준호는 5월2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소스코드문제, 중복 아이피문제, 유명당원 문제등 전략기획실 쿠데타 주모자들과 진상조사위에서 주문하는 대로 구 당권파를 타격하는데 선봉에 선다. 심지어 중앙위에서 먹살 잡히는 개고생까지 하며 시키는 대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조준호 입장에서는 이런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인천, 울산, 참여당, 노회찬-심상정파가 자신을 밀어주면 충분히 구 당권파측 후보를 누르고 차기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머리가 없는 조준호는 돌격대 역할에 부상까지 당하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일이 끝나면 뺨 다할 운명이란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개고생은 혼자 다했는데 밥상은 인천연합이 내세운 강기갑에게 돌아가 버린 것이다. 이미 신 당권파 측에서는 차기 당대표로 강기갑 내지는 심상정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신 당권파 입장에서 당원 숫자에서 구 당권파를 압도하지 못하는데다 모든 논란의 중심이자, 원한을 사고 있는 조준호를 차기 당대표로 민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뺨을 당하고도 자신이 뺨 당한줄도 모르는 조준호의 머리가 불쌍하게 느껴진다.

4. 언론플레이의 달인 유시민

총선 결과 천호선, 조성찬 낙선과 참여계 비례후보 전원 낙선으로 흥분한 유시민은 쿠데타 주모자들과의 모의 속에 진상조사보고 기자회견이 있기 얼마 전부터 당 게시판, 언론등에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앞으로 진상조사 보고에 대해 경악할 만한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사실 유시민은 자신이 파견한 박무를 통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물론 진상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장투표 말고는 심각한 내용이 없었던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뺨튀기를 해서 '총체적인 부실, 부정선거'로 몰아야 했고 여기에 동원된 논리가 바로 소스코드 조작설, 중복아이피설, 유명당원설 등등이었다. 이시기에 각 정파의 우두머리 격이 모인 전략기획실 쿠데타 모의자들 사이에 이왕 판을 만든거 전체적인 부정선거로 몰아 이석기, 김재연을 쳐내고 이 여세를 몰아 당권파를 제거하여 당권을 장악하자는 합의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석기 당선자를 과격으로 삼은 진상 조사 보고서는 그렇게 탄생된 것이다. 유시민이 애국가 논란을 일으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언론의 동향을 보면 이정희 대표가 공청회를 하면서 언론이 한발을 빼는 모양새였다. 왜냐면 너무도 사실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다보니 언론들도 이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며, 문제가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 혹시나 자신들이 했던 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시민의 애국가 논쟁이 등장한 것이다. 자유주의자 유시민이 언제부터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애국가를 사랑했던 말인가? 유시민이 애국가 논쟁을 일으킨 것은 조중동의 손을 빌려서라도 당권파=경기동부=중복세력=이석기,김재연으로 몰아가고 싶었던 열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중복의 피 냄새를 맡은 보수세력과 조중동을 비롯한 하이에나 보수언론들에게 유시민의 애국가 논쟁은 더 강력한 유인제로 작용하였다. 유시민의 애국가 논쟁에 가장먼저 화답한 것이 새누리당이었다.

이런 걸 두고 이이제이라고 그러나? 유시민의 이러한 행동은 이미 이념적으로 변질된 인천연합이야 신경쓸 것이 없고, 그나마 이념적 지향이 있는 울산연합의 경우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한 배를 탄 마당에 그들이 이문제로 이탈 할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언론플레이의 압권은 이석기 당선자와의 면담 건이었다. 면담을 요청한 것은 유시민이었다. 그런데 면담 이후 언론에 대고 구 당권파 측에서 자신에게 당권을 줄테니 지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자신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이석기 당선자가 당권-지분 거래를 제안했냐?고 하니 그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언론이 이석기 당선자와 구 당권파를 구분해서 보고 있었던가? 이석기 하면 구 당권파의 실세라고 단정 짓는 것이 일반적인 보도였다. 그래서 언론은 유시민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권파=이석기=당권,지분 거래제안 이런식으로 썼던 것이다. 참으로 교묘한 언론플레이이다. 어쩌다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명이었던 유시민이 이리도 조잡하고 허접하며 교활한 정치인으로 굴러떨어졌는지 정말 당황스럽게 느껴진다. 유시민이 말했는가? 진보의 영혼은 팩트에 있다고...그가 영혼을 판 이상 이제 그에게 팩트건 나발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하는 것만 남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강금원회장의 말이 떠오른다. "유시민은 우리와 그 무엇도 상의한 적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 (노무현)대통령도 그런 면을 싫어했다. 남을 위해 정치를 해야지 나를 위한 정치는 곤란하다"

유시민의 언론플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선관위에서 각 시도별 득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떠들어 댔다. 무엇이 두려워서 선거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구 당권파와 한통속인 선관위원장님이 이미 이정희 대표를 위시한 구 당권파측에 구체적 선거결과를 보고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던 모양인데, 구 당권파 측에서 선거결과가 공개되면 뭔가 크게 두려운 것이 있는가보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선관위원장은 이미 자료를 진상조사위에 다 넘겨서 구체적 선거 결과를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정희 대표를 위시한 누구도 선거결과를 알 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오직 자신만 구체적인 선거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유시민과 조준호가 강하게 압박해서 온라인 선거를 담당했던 업체 사장이 시도별 득표현황은 물론 개개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까지 열어서 유시민에게 보내준 것이다. 물론 그전에 박무가 데이터 원본은 시디로 가져갔다. 사장이 당에 보낸 공문에 이 사실이 적혀 있더라나....그런데 문제는 업체사장이 이 자료를 메일로 보냈다는데 있고 이것이 이미 검찰 손에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라는데 있다. 보수단체에서 검찰에 이번 부정선거 시비 관련해서 고발했는데 당연히 검찰이 업체사장 메일을 압수수색 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번 비례선거에 참여했던 4만5천여 당원의 투표정보가 유시민과 진상조사위원은 물론 이미 검찰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게 그들이 그토록 말하는 민주주의와 상식에 맞는 행위일까? 사실적으로 말해 유시민, 박무, 조준호는 형사법으로 처벌을 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들이다. 조준호가 투표 데이터를 다 까서 자신에게 달려며 선거시스템 업체 사장에게 했다는 말이 가관이다. 일기 쓴 사람이 일기장 달라는데 뭐가 문제냐? 했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상식이하 정도가 아니라 무뇌아 수준이다. 조준호에게 묻고 싶다. 4만5천여명거 일기를 네가 다 썼냐?

5. 기회주의의 대명사 인천 신당권파

윤금순 후보는 자신이 정파의 후보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 전국여성농민회 후보라는 타이틀을 동원했다. 그런데 좀 유치한 느낌이 들었다. 전국 당원들 중 전여농 당원들이 몇이나 되나? 대략500명도 안될 것으로 추산된다. 윤금순 후보는 전여농 후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뿐, 실은 인천쪽 신 당권파의 후보였다. 원래 인천쪽 신당권파 상층에서 이정미도 비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터라 윤금순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인천 신당권파측은 정치노선상으로 보자면 범 자주파의 정치 노선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이미 오랜 전에 폐기했

다. 기층 현장단위에서야 뭐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상층부가 이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폐기한 것만은 사실이다. 정치노선과 이념이 폐기된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권력욕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인천쪽은 당내에서 구 당권파에 밀려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주도권을 찾고 당권을 쥐는 일이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되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통합당시에는 좌파와 손잡고 구 당권파와 구 참여계를 치다가 통합이후에는 구 참여계, 좌파와 손잡고 구 당권파를 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인천 신 당권파 상층에서는 윤금순을 사퇴 시킬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좌장적인 김성진도 낙선한 마당에 윤금순 까지 물러나면 인천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명도 없고 당권도 쥐지 못하는 빈껍데기에 불과해 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준호의 오버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낳았다. 그들 스스로도 감당이 안될 만큼... 어느쪽에 붙어야 유리한가 하는 후각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들은 재빠르게 윤금순 사퇴카드를 내고 쿠데타 세력으로서의 합류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그토록 갈망하던 당권을 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이후 만약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라도 실현되는 날이면 공동정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윤금순 사퇴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던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정의의 사도로, 당 혁신의 기수로 탈바꿈하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장투표함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무효표의 대다수는 윤금순 후보 표였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더라면 윤금순 후보는 사퇴를 했어도 열 번은 했어야 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가관인 것은 윤금순 후보가 사퇴하면서 낸 성명서였다. '일말의 부정도 없었지만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사퇴한다'. 정말 어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전여농과 함께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 전농 분들이 하는 말이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이정미가 구 당권파를 찾아와 1,2,3번 사퇴하자고 제안했지만 구 당권파측에서 당연히 거절 했다고 한다. 그들의 표현대로 인천쪽 후보도 사퇴하니 경기동부쪽 후보도 사퇴하라는 식이었다. 눈에 흠이 들어갈 지언정 소위 구 당권파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사람들의 심금을 자아내던 윤금순의 연극무대도 이정도면 블록버스터 급이다.

6. 울산 신당권파 상층은 왜 쿠데타에 가담했나?

울산 신 당권파의 좌장적인 정대연이 총선 전에 전략기획실에서 쿠데타 주모자들과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5월2일 이후 중앙위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인 행동은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울산, 부산, 경남을 아우르고 있는 울산 신당권파의 영향 하에 있는 당원들만 10,000명 가까이 된다. 더군다나 한국 노동운동의 큰 축이며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하는 울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울산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심상정과 권태홍, 유시민의 시다바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네도 당권파로 몰려 뒤질래? 그게 싫으면 닥치고 따라와! 동네 양아치들의 이 말 한마디에 주눅든 겁 많은 거구의 유도선수가 고개 푹 숙이고 뒤따라가는 꼴이라고나 할까? 지금 한국 민중운동의 주요한 담당자였던 범 울산(부산, 울산, 경남)의 실질적 리더는 구 참여당의 들보잡 권태홍과 그 위에 있는 유시민, 그리고 심상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위때 구 당권파와 신 당권파간에 1,2번 안건은 처리하되 3번 안건(비례대표 사퇴내용을 포함한 혁신안)은 추후 전국운영위 등에서 재논의 하자는데 까지 합의가 됐었으나, 권태홍이 반대하고 심상정이 무시했다고 한다. 이들이 반대하니 울산 신당권파 상층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들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그러니 부산, 울산, 경남의 진짜 실세이자 지도부가 권태홍-유시민-심상정이라는 것이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사실, 인천쪽 상층부야 그 기회주의 속성이 오래전부터 보여 왔던 자들이라 충격적이지 않았지만 울산 상층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비수를 꽂고 쿠데타 세력의 품에 안긴 것은 구 당권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현재 울산 신 당권파 내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내분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 상층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울산북구 선거 패배와 창원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피해보

고 싶은 생각과 이 기회에 구 당권파를 몰아내고 당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권파로 물리기 싫은 비겁함도 있었다고 본다.

진보당에게 있어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충격은 관악을 사건이나 원내교섭단체 진입 실패가 아니라 울산, 창원등 노동자 밀집지역인 영남 전패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측 후보가 그렇게 중량감 있고 썸 후보도 아닌 조건에서 전패했다는 것은 울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구 당권파측은 어쨌든 자신들이 낸 후보는 다 당선 시켰다. 그런데 울산은 자체적으로 야권연대 어찌고 하면서 있는 품은 다 잡았지만 결과는 전패하고 만 것이다. 총선 시작 때 부터 경기동부 논란을 시작으로 참여당계에 의해 김창현도 손석형도 경기동부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선거이후 울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상황에서 조준호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자마자 이들은 ‘우리는 구 당권파도 경기동부도 아니다’를 해명하는데 급급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선거패배의 책임과 함께 당권파-경기동부로 물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잘 알면서도 국민 여론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비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옛 말에 하늘에 지은 죄는 사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근안 같이 구천에 사무칠 죄를 지은 놈들은 하느님 할아버지가 와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놈들이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느니 이 나라야 말로 미쳐 돌아가는 나라인 것이다. 오늘 울산 상충부가 하는 행동도 하늘에 지은 죄와 진배없다고 할 것이다. 당권 욕심에 사로잡혀 허위사실로 동지를 모함하는데 동조한 행위가 결국은 정권과 수구 보수세력의 당 파괴 책동에 대문과 안방 열쇠 까지 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울산 상충부는 이 역사적 대죄를 누구에게 기도해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7. 구 당권파의 정공법 대응

구 당권파는 진상조사보고서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적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 진상조사보고서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본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의 허위성, 악의성, 조작성을 폭로하면 당연히 그에 기반하고 있는 비례후보 사퇴요구, 비대위 구성건도 설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정희 대표가 진조위의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집을 들고 직접 공청회를 열었던 것이다. 이대표의 공청회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동안 이정희 대표를 심정적으로 아끼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향이었지, 신당권파가 장악하고 있는 당원들까지는 아니었다.

원래 진실공방이란 것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공격하는 측이 유리하지 해명하는 측이 유리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당시의 언론 환경은 그야말로 어떤 언론사도 구 당권파의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해 주지 않는 원사이드 게임이었다. 논리는 만들어 내기 나름이며, 더군다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제거하고 유리하다 싶은 정보만 언론을 통해 흘리는 조건에서 구 당권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허위, 조작 폭로는 처음부터 국면을 뒤집을 정도의 폭발력은 가지기가 어려웠다. 구 당권파 측에서 방심했던 측면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진상조사의 핵심의제가 1번 윤금순과 9번 오옥만 사의에 별어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진상조사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는 식으로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꾸러지고 당내 전략기획실의 쿠데타 주모자들이 흥계를 꾸미고 있던 시점에서도 이정희 대표는 부산에 내려가 현장 노동자들과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구 당권파들도 각 지역에 내려가 총선에 출마하고 난 뒤 뒷정리를 해야 할 시점에서 진조위에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조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이청호가 소스코드 조작이니 어쩌니 떠들어 대고 유시민은 여기에 더해 경악할 만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진조위 구성 자체도 편파적으로 구성하면서 진상조사 보다는 일방을 공격하고 제거하기 도구로 사용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구 당권파 누구에게도 진조위원이 누군지,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일체 알려 주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미 무효화된 현장투표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발견된 것이 없었다. 그동안 IT업계에 종사하며 온라인 투표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박무도 나중에 소스코드를 몇 번 손 본적은 있지만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실제도 그랬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써 온라인 투표를 담당했던 업체정도 규모의 회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이것은 박무가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었다. 구 당권파 입장에서도 온라인 조작이나 현장 부정투표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1등을 만들 수 있는데 구태여 부정한 방법을 쓸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만일 온라인 부정투표가 있었다면 그 혐의는 오옥만 측이 가장 유력하다 할 것이다.

다 알려진 사실처럼 오옥만은 제주도에서 1,400여표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했다. 물론 자기 종친사람 1,500여명을 집단입당 시킨 결과이기도 했으나 노동자들같이 현장이 아니라 한 가정집 또는 사무실에서 몇 백명씩 투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종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한대의 컴퓨터에서 몇 백명씩 찾아와 투표하려면 줄서서 기다리면서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광경은 목격된 적이 없다. 오옥만후보는 제주에 콜센터 3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복 아이피 투표도 오목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상황을 종합 해 보면 이번 사태는 확실히 기획된 흔적이 보인다. 진상조사보고 기자회견 며칠 전에도 조준호는 구 당권파 당직자들에게 진상조사 해 봤는데 별문제가 없더라고 이들을 안심시키는 설레발을 치는 노련함(?)을 보여 주었고, 상황이 심각함을 알고 급거 상경한 이정희 대표가 주재한 대표단 회의에서도 문서공개가 아닌 구두공개만 함으로써 구 당권파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게 조준호 머리에서 나왔을까? 조준호는 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동안 조준호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적 주장이다. 사실 조사결과 발표 당일날 까지도 조사보고서는 없었다. 만드는 중이었던 것이다. 대표단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시급하게 발표해야 했기에 조사보고서 조차도 없는 언론플레이용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구 당권파를 찍어내기 위해 이석기 후보와 관련한 자료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진상조사위와 이들의 지휘 기관인 전략기획실 쿠데타 주모자들은 이때 상상을 불허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 그것이 바로 ‘총체적인 부정과 부실로 몰아가자, 그래서 모든 후보를 사퇴 시키고 당 내에서는 비대위를 만들자, 아마 이러면 구 당권파는 반드시 반발할 것이다. 구 당권파가 반발하고 버티면 모든 부정의 주범으로 구 당권파를 몰고 이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 언론과 여론은 우리편이다. 이후 우리가 다수 이므로 충분히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우선 비례 1,2,3번 사퇴의 여론을 만들어가자’ 이런 술수를 꾸민 것이다. 여기서 당권을 매개로 윤금순 사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인천을 달랜 것이다. 방심하던 구 당권파가 권모술수와 흥계에 이끌리 난 신 당권파들에게 치명적인 카운터펀치를 맞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만약 구 당권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부터 조중동과 합세한 신당권파의 당권 찬탈음모, 자해공갈단식 누명씌우기 분쇄로 전선을 쳤더라면 양상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구 당권파가 이것을 모를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신 당권파 측에서 이런식으로 까지 눈이 뒤집혀서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전 민중운동시절부터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대립과 갈등이라 할지라도 양쪽모두 어느 정도의 사실에 기초한 대립과 갈등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실여부를 떠나 보수언론과 사이비 진보 언론들을 등에 업은 무차별적인 용단폭격이었다. 구 당권파는 마지막 선은 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즉, 이 전선을 치게되면 어느 쪽이 나가든 당이 쪼개지는 것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눈이 돌아가 이성을 잃은 자들은 금도고 튀고 없었다. 구 당권파는 고지식 하리만치 반격을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반격을 하고 싶어 했다. 신 당권파와 같은 방식의 반격은 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는 생각이었으며, 정치가이기 전에 운동가로서 소유한 사상과 신념이 이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8. 법조인 이정희의 중대결단

변희재, 진중권류의 인간들이 이정희 대표가 구 당권파의 아바타라고 말하는 것은 구태여 대꾸할 필요가 없는 실성한 소리 정도로 들으면 맞을 것이다. 이정희 대표가 전국운영위때나 공청회, 그 이후 유령 주민번호문제까지 언론과 신 당권파의 무차별 공세 앞에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나선 것은 누구의 조종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자리를 비운사이 쿠데타 주모자들의 모함 속에 죄 없는 당원들과 동료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리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대표로서 이들의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는 책임감,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언론재판을 통해 인격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때문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중앙위 안전확정을 위한 전국운영위 때부터는 구 당권파 누구도 이정희 대표를 막지 못했다고 한다. 전국운영위 사회를 자신이 다시 맡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은 평소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사실 이정희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위치였지, 언론의 포화를 맞아가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유령주민번호, 유령 당원명부등의 문제에 대해 일일이 해명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구 당권파들도 그녀를 정치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가 직접 쿠데타 주모자들의 행위를 폭로하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중대결단을 한 이후 그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장면에서 권모술수와 패거리 정치, 세 치 혀로 사람의 귀를 농락하려는 정치인 유시민과 어떠한 인격적 모욕과 정치적 타격을 받더라도, 심지어 전도 양양한 촉망받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인 이정희 대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랬다. 유시민은 이미 그렇고 그런 일부 패거리 정치집단의 우두머리 정도로, 잔쟁이 정치인 정도로 굴러떨어졌다. 소탐대실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강심장을 가진 그 누구라도 이정희 대표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녀처럼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 조준호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들이 이정희 대표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금속노조 박상철과 화섬연맹 이상진이 이정희 대표 면전에 이년, 저년 쌍욕과 함께 ‘인간의 탈을 쓰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패악질을 한 것이다. 아무리 인간 말종들이라지만 공당의 대표에게 그것도 여성에게 함부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들은 노동자의 대표가 아니라 쓰레기이자 폐륜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백번양보해서 이정희 대표가 구 당권파의 아바타였다 할지라도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압박, 정치적 몰락을 감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이정희 대표가 당장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과 인격적 모독을 당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세상 그 어떤 정치인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얻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정희 대표 자신도 여리고 똑똑한 정치신인에서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철의 심장을 가진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이것이 그녀가 얻은 첫 번째 귀중한 자산일 것이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 억울함과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한생을 두고도 겪기 어려운 온갖 모욕을 다 견디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이정희대표는 자신이 구하고자 했던 당원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동지가 될 것이다. 비가 올때 우산 씌워주는 사람보다는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자신이 진창길에 나뒹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비를 맞기 위해 나선 진정한 친구를 위해 이들은 목숨 걸고 지지하고 도와 나설 것이다. 이정희 대표에게 이것보다 더 큰 정치적 자산이 있을까?

필자는 확신한다. 앞으로 당이 더 많은 시련의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야 하겠지만 당의 앞날은 창창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머지않아 김대중, 노무현 이후 한국 정치사를 뒤흔들 위대한 여성 정치가, 진보당이 낳은 불세출의 여성정치인 이정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 비례 1,2,3번 사퇴에서 정치적 희생양론 까지

진조위 진상보고 기자회견 직후부터 1,2,3번 사퇴 예기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전략기획실 쿠데타 주도 자들에 의해 1,2,3번 사퇴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 게시판에서는 이청호가 1,2,3번 사퇴 나팔을 불고, 이에 조중동과 한겨레, 프레스인, 경향, 공중파가 화력을 집중해 맞장구를 치며 언론을 도배하며 어느날 갑자기 뜬보잡 조준호는 양심을 가진 영웅으로 되었고,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은 혁신을 거부하는 역적이 된 것이다. 1,2,3번 사퇴를 주장한 것은 전략기획실 정성희가 처음으로 주장했고 권태홍이 이에 장단을 맞췄다.

그런데 여기서 신 당권파들의 논리적 모순과 악의성이 드러난다. 애초 이들은 소스코드 조작 및 중복아이피 문제를 제기하며 비례당선자의 사퇴를 주장했는데, 그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른 모든 비례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6석의 비례의원을 반납한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을 텐데 경쟁부문만 사퇴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재연 당선자까지 도매금으로 넘겨 사퇴시키고자 한 것도 그렇다. 청년비례 문제는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상태에서 조차 나중에 진조위 발표 때 함께 발표한다며 결과 발표를 망했다. 그런데 진조위는 청년비례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조위 보고서 어디에도 청년비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총체적 부실, 부정이라며 1,2,3번 사퇴라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타 전략명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찬반투표로 진행된 청년비례까지 도매금으로 넘기려고 한 것이다. 언론이 이를 모를 리 없었으나 눈앞의 좋은 먹이감 앞에서 이들은 이성을 잃었던 것이다.

1,2,3번 사퇴입장에서 정치적 희생양론으로 전이된 것은 이정희 대표의 공청회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정희 대표가 공청회를 통해 누가 어떤 부정을 얼마만큼 저질렀는지 대라, 왜 정작 하라는 조사는 안하고 이석기 당선자에 대해서만 집요한 표적 조사를 했는지 이유를 밝히려며 주어가 없는 조준호의 진상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자 급기야 나온 것이 희생양론이었다.

쉽게 말해 '너희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로서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사퇴하라는 거다, 억울하더라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솔깃한 말이나 그 이면에 가려진 본질과 의도를 파악하면 이것이 얼마나 간교한 술수인지 알게 된다.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이미 이석기, 김재연+당권파=중복파=부정선거 주범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희생양론에 의한 사퇴는 결국 부정선거 인정으로 되며, 이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의 혁신과 이의 담당자로서 비대위는 부정선거의 주범들인 구 당권파를 배제, 제거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희생양론 또한 진짜 목적은 소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아니라 구 당권파 제거와 당권 찬탈에 있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10. 심상정의 노련한 중앙위 폭력유도

사실, 중앙위원 명단 문제는 구 당권파나 신 당권파나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일 들은 내용이지만 구 당권파측에서는 중앙위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강령, 규약은 통과시켜 주더라도 비대위나 비례후보 사퇴 안건을 어떻게 철회시킬지에 대해 고심했다고 한다. 구 참여당측 인사들의 말을 들어봐도 중앙위원 명단 변경문제에 대해 자신들에게 배정된 숫자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명단 변경이 문제가 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 당권파 측에서는 그동안 유명당원, 중복 주민번호 어찌고 하면서 구 당권파 측에 공격을 퍼부어 댔는데 자신들이야말로 말로 유명 중앙위원을 만들어 냈으니 구 당권파 측의 공세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것이다. 구 참여당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위원 명단 변경은 한마디로 표를 조직한 것이다. 중앙위 자리에서 표 대결을 해야 하는데 약간 애매해 보이거나, 참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중앙위원들을 충성파들로 임의적으로 교체한 것이다.

여기서 '숫자만 배정한거 아니냐? 명단은 전날까지만 확정하면 되는 사안이었다'고 하는 신 당권파측의 주장은 언

뜻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오류가 있다.

통합당시 각 통합주체에게 중앙위원 숫자를 배정했지만, 이 숫자배정에 의해 확정된 중앙위원은 이미 사라진 참여당 또는 민주노동당, 통합연대의 중앙위원이 아니라 현존하는 통합 진보당의 중앙위원으로서 그 명단을 변경 할 시에는 통합진보당의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거쳐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숫자배정이 아무 원칙 없이 이루어 진게 아니라 기존 각 통합 주체의 기존 중앙위원을 그대로 유임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합 진보당의 중앙위원은 '기존 양당의 중앙위원'이라는 명단이 확정된 중앙위원인 것이다. 또한 비율상 참여당의 기존 중앙위원에 비해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 숫자를 늘려야 했는데 이 때도 각 시,도당 위원장 및 사무처(국)장에게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은 명단이 없는 채로 중앙위 전날까지만 확정하면 되는 가상 중앙위원이 아니라 기 확정된 명단이 있는 중앙위원이었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신 당권파 측에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말하던 민주주의와 상식이라는 기준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중앙위 표결을 위해 표 조직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교체한 것이다. 또 이에 대해 구 당권파측 중앙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숫자만 배정했다는 식으로 동문서답식의 억지주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구 당권파에 대해 패권파 운운하며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워야한다는 논리로 공격하던 신 당권파 측의 이중적인 태도 즉,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민낯이 날낯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서울 중앙위원이 제주도 중앙위원으로 등록돼 있는 식이었고, 아예 지역위원회 당직자가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임의로 명단을 통째로 변경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확인된 것만 50여명이 넘었다. 950명 중앙위원을 전수 조사하는데 주민등록증 대조하면 1시간이면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무작정 밀어부치기 식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숫자상 압도적으로 많으니 밀어부쳐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심상정의 교활함이 빛을 발했다. 심상정의 민주노총 경력이 몇 년 인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폭력사태등을 직접 경험했던 심상정, 또 분당,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권모술수의 달인의 경지에 오른 모습이었다. 민주노총내 자주파가 세운 김영훈을 좌파인 심상정이 애들 데리고 노는 듯한 정도였으며, 종놈 부리듯이 할 정도였다. 구 당권파측 중앙위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참관인들이 불법 중앙위 해산을 주장하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진을 빼놓을 작정을 하더니 그게 여의치 않자 1번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노동조합을 해본 사람이라면 당시 모두가 흥분된 상태에서 심상정의 이런 오버에 대해 참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100명 가까운 중앙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의 없으니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 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뜻하지 않은 유명 중앙위원 문제로 신당권파의 의도가 암초에 부딪치자 무리수를 뒤서 기자들이 대거 취재하는 앞에서 몸싸움을 유도한 다음, 폭력세력으로 구 당권파를 매도하고 전국운영위 때처럼 전자투표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심상정을 비롯한 쿠데타 모의세력의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당일 구 당권파와 신 당권파 사이에 합의되었던 3번안 추후논의, 1,2번안 통과 합의를 권태홍, 심상정이 파기한 것도 당권파측을 자극하기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중앙위는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언론은 마치 이런 사태가 일어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신문지상과 공중파에 대고 구 당권파에게 맹폭을 가했다. 사실 지난 예기지만 구 당권파 측에서도 이런 사태를 우려 했었다고 한다. 몸싸움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유리할 지는 물어보는 것이 바보 아닐까? 유시민이 언론에 대고 잘 기획된 폭력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오히려 당일 상황을 지켜보면 신 당권파 측의 기획된 폭력유도가 정확히 맞는 말이다. 조직적인 통제도 오히려 신당권파 측에서 더 치밀하게 진행했다. 술한 정회를 반복하면서도 그 많은 중앙위원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반복했고, 단상점거사태 이후 웬만하면 파장분위기라 집에 돌아갈 법도 한데 거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자리를 채우면서 기어코 이번 중앙위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결연한 의지도 엿보였다.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1. 구 당권파는 왜 당원총투표를 제안했나?

구 당권파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가 끓어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작에 의해 형성된 여론이라 해도 여론은 여론이었다. 그래서 고심끝에 신당권파의 요구대로 퇴각을 고민했던 것이다. 다만, 모든 부정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부정선거 주범으로 몰려 사형선고 받듯이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단순히 당내 당권찬탈 음모속에 벌어진 부정선거 뒤집어쓰우기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진보세력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정권과 조중동의 친북, 종북 공세와 버무려져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세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면 진보세력은 반공 보수세력과 조중동이 옴아맨 이 사슬을 영원히 벗을 수 없다 판단 한 것이다. 조중동에서 일관되게 당권파=경기동부=패권=종북=부정선거의 논리로 공격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진보라 자칭하는 일부 지식인들과 진보언론도 이성을 잃고 달라 들었다. 원래 노동조합에서도 집행부가 문제가 있으면 현장의 각 조직들이나 조합원들이 내려오라고 주장하며, 이런 경우 중도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당 내부의 거짓 폭로와 이에 기반 한 외부의 무차별적인 확대 가공보도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것이다. 2008년 분당 때 심상정, 노회찬도 종북, 친북 논란이 자주파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뒤집어쓰우며 분당을 결행 한 적이 있다. 그들이 종북, 친북 논란을 일으켰으나 그것이 주목적이 아님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총선 전부터 시작해서 진상조사 기자회견 이후 오늘 시점까지 당 게시판에서 일관되게 올라오는 글들이 바로 친북, 종북=당권파=부정선거였다. 당권 찬탈 모의자들은 조중동과 보수세력이 사상 유례없이 자기들과 한목소리를 내는데 대해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구 당권파를 몰아내는데 눈이 뒤집히다 보니 조중동, 보수세력과 일시적 동맹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이 더 큰 나발을 불어주니 구 당권파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도 생겼을 것이고 또 은근히 즐기기도 하였다. 이들이 조중동, 보수세력과 조직적 동맹을 맺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심정적 동맹을 맺은 것은 부정할래야 부정 할 수 없다. 오히려 조중동 보수세력을 이용하려 한 면도 엿보인다.

조준호 기자회견이후 단 한번이라도 신 당권파에서 조중동과 보수세력을 비판한 것을 본적이 있는가? 원래 한번 사육에 눈이 멀면 적과아를 구분하는 신경이 무뎈진다. 오히려 적의 적은 동지라는 인식이 생기게 마련이다.

구 당권파가 당원 총투표를 제안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중동과 보수세력의 집중포화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 퇴각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리 구 당권파가 장악하고 있는 당원들이 상당수라고 해도 당내의 물론 모든 언론과 신문지상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어 대는데 정상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사퇴반대에 뜻을 함께 해줄 당원은 20%도 안 될 것이다. 구 당권파도 이점을 잘 알고 있었다. 구 당권파는 당원의 뜻에 따라 물러 날 수는 있어도 조중동앞에 굴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퇴각을 하되 이런 당원의 요구로 물러나는 퇴각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신 당권파는 이를 개 무시해 버린다. 조직표를 동원해서 비례사퇴를 뒤집으려 한다거나, 투표를 무산시켜 사퇴여론을 무력화 하려 한다는 정말 웅졸하고 치졸한 생각을 한 것이다.

이들이 이 정도로 자기당원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본심이 당내 민주주의 정착이 아니라 바로 당권찬탈이라는 사육에 눈이 멀어 있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 당권파의 당권찬탈이라는 목적만으로 사태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인과관계가 성립되기에 부족한 석연찮은 점이 있다. 조준호의 기자회견부터 중앙위 사태, 그리고 강기갑 비대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그들이 보여 왔던 리버럴한 모습과는 전혀 낯선 너무도 세련되고 일사분란하며 잘 기획된 모습이 그것이다. 사리사육에 눈이 멀면 원래 실수가 많은 법인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 미스테리는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6월 등원시각이 다가오면서 초조해진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조중동은 종북파 의원인 이석기, 김재연의 등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들 신문지상에서 강기갑 비대위나 당원 비대위 따위는 이제 관심사항이 아니다.

중복, 친박세력 국회등원 저지, 이것이다. 이 공세를 통해 민주당의 약점을 건드리고 향후 민주당으로 하여금 야권 연대 파기선언을 강요하여 정권 재창출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동시에, 19대 국회 정권교체를 전후로 해 진보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이는 민족문제, 통일문제등에 대해 사전 색깔 칠하기로 선제공격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당을 중심으로 한 공안탄압도 기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의 뜻에 의해 퇴각하고자 했던 바램이 무너진 이상, 지금 사퇴하는 것은 조중동 및 수구 보수세력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으로써 당이 이들에 의해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해부당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사퇴하면 조중동과 수구 보수세력이 공세를 중단할까? 오히려 그 반대로 보여진다. 당의 밀동까지 다 들어내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사퇴여부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공들인 당의 존망과도 관계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자기 동료를 발가벗겨 적들에게 내주고 있는 꼴이 오늘 신 당권파들과 강기갑 비대위, 그리고 일부 진보언론과 진보지식인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이 조그마한 당에서도 이럴진대 정권이라도 잡은 상태라면 칼부림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동지, 의리, 믿음, 신뢰등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 마저 다 내던지고 악어의 눈물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들은 보수 꼴통들과 0.1mm의 차이도 없을 만큼 유사하다 생각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그동안 진보지식인, 진보언론이네 하며 갖은 품을 잡아왔던 소위 진보인텔리들이 인기와 언론공세 앞에 얼마나 비굴하고 나약한지 그 속물근성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걱정어린 눈빛으로 묵묵히 지켜봐 주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민주노총의 노동관료들은 제외하고)과 농민들이 참으로 고맙게 느껴진다. 당이 잘 나갈 때나 시련을 겪을 때나 언제나 우직하게 자기자리 지키고 있는 그들, 이래서 우리당이 언제나 이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들에게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해본다.

12. 유명당원은 정말 있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가 틀린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다. 당 가입은 몇 가지 경로로 이루어 졌다. 당사자가 가입원서를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로 보내면 지역위원회에서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된다. 참여당의 경우 지역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도당에서 입력하게 된다. 출금방식에서 휴대폰 인출의 경우 민노당 당원관리프로그램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 당시에 휴대폰 납부자는 참여당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하였다고 한다. 직접납부의 경우 본인 서명의 당가입원서와 입금확인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해서 팩스로 각 도당에 보낸 뒤 도당에서 참여당 또는 통합진보당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문제는 민주노동당 당원관리프로그램의 경우 신용정보기관과 연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틀리더라도 입력이 되었다고 한다. 통합진보당 홈페이지를 통한 당원가입의 경우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입력해도 가입이 되었다. 다만, 계좌번호가 틀려서 당비 출금이 안될 경우 당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입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실수나 오타, 오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당권확보 마감 시한을 앞두고 서는 밀려드는 당가입원서 때문에 중앙당에서는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몇 날 몇 일을 밤샘작업 해서 입력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민노당, 참여당 당원관리프로그램 및 홈페이지에 있는 당권자를 합쳐서 하나로 통합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다 보니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당원이 전남당원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수정되지 못한 채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다. 그 원인은 통합연대측을 배려한 원 포인트 당원, 당권자를 허용한 때문이다. 참여당은 6개월, 민노당은 3개월을 당비를 내야 당권이 생기나 통합연대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한번만 당비를 내도 당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례후보에 출마한 후보측에서 너도나도 원 포인트 당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옥만 후보측이다. 제주도에선 본인 종친 1,500여명을 원 포인트 당권자로 가입시킨 것이다.

민주노동당, 참여당, 통합진보당 당원관리 프로그램상 유명당원인지 아닌지는 주민번호가 허위인지 아닌지로 판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좌에서 당비가 출금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계좌에서 복수의

당비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휴대폰 납부의 경우 본인 휴대폰이 아니면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납의 경우는 극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물론 가족당원의 경우는 한 계좌에서 몇 명의 당비가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전화 한통화면 확인이 가능하다. 직접납부의 경우는 입력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도당에 제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당원관리 프로그램을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당 가입을 하고도 당권이 주어지지 못한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당 가입원서에 따라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시 계좌가 농협 중앙회인지 지역 농협인지 구분해서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당 가입원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입력하다 보면 농협 중앙회인데 지역농협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당연히 당권이 생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선거인 명부 보니까 당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일일이 수정해 주어야 한다. 기업은행 가입자의 경우는 자기 휴대폰번호로 계좌번호를 만든 사람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잘못 기입한 것으로 알고 빼 놓았다가 입력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신 당권파 측에서 중복 주민번호에 근거한 유령당원 문제를 제기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 실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황당한 이야기일 뿐이다. 당원명부상의 신고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당비가 빠져 나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중복 주민번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선전인 것이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오타도 있을 수 있다. 당 당원관리 시스템이 신용평가 인증 기관과 연계돼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가입이 안 되는 시스템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신당권파측이 제기한 바, 유령당원 존재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상적 계좌 인출 여부를 놔두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를 언론의 입맛에 맞게 마치 거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듯이 떠들어 대는 것은 전형적인 기만적 선동구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 주민번호 숫자가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그럼 이들이 왜, 누가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기를 쓰고 자신의 당이 거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문제를 꼬집어내고 조중동앞에 고해성사 못해 안달이 났을까?

신 당권파 측에게 물어봤다. ‘중복 주민번호도 그렇고, 중복아이피도 그렇고, 다 이석기, 김재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구 당권파 측에서 부정행위를 조작했다는 건가?’ 이들은 이에 대해 ‘그건 아니다. 특정 후보측이나 세력이 했다는게 아니고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런 거고 당내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우기 위한 거다’라고 대답한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대답이었다. 아니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운다는 사람들이 ARS투표까지 하나? 이 세상에 투표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론조사도 아니고 당의 진로를 믿는 중대한 의결과정에 구 참여당 처럼 ARS로 투표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하자. 당내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우겠다고 나선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되나? 본인이 떼먹은 특별당비는 그렇다고 쳐도 보좌관들이 낸 당비까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데 이거야말로 명백한 공금횡령 아닌가?

신 당권파 측에서 특정후보와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들의 속이 뻔히 보이는 궤변에 가까운 변명일 뿐, 본인들과 철저히 암묵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언론은 이 모든 부정의 주범으로 구 당권파와 이석기, 김재연 후보를 지목하고 있는 중이었다. 언론이 만약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옥만 후보나 윤금순 후보의 부정문제, 이영희와 노항래의 순위 바꿔치기에 대한 유시민, 조준호의 부정행위를 조명했다면 신 당권파들이 앞다투어 이런 고해성사를 했을까싶다.

중복아이피 문제도 중복 주민번호 문제와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 이들이 사실 부정인지, 과실인지, 실수인지도 명확히 규명 안 된 것을 가지고 막연히 총체적 부정, 부실의 근거인양 언론에 피를 토하듯이 토해내고 있는 것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배구로 치자면 신 당권파 세터가 아무데로나 토스를 해도 보수언론 공격수들이 A쿼, B쿼, 시간차, 백어택을 구 당권파 진영에 자유자재로 날리며 서로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복아이피 문제, 유령 주민번호 문제가 시들해 지자 최근 박무는 그동안 차마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라며 이번에 선거인 명부 상의 유령 전화번호를 공개 하였다. 필자가 궁금해서 구 참여당 쪽과 구 민주노동당 쪽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간혹 자기 전화번호를 010-0000-0000 이런식으로 적어 놓은 사람들이 실제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다. 당원 등록을 하려면 당원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당 가입자 본인이 전화번호 입력을 원치 않으니 당원 가입원서에 적힌 대로 그대로 입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투표시 인증번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투표 말고는 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꼭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당원정보 시스템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본인이 당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 전화번호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또 신규 입당자들 중 010-0000-0000 이런 식으로 입력한 경우 그대로 선거인명부가 작성 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투표시 당에 신고하여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하면 30분 정도 후에 투표가 가능하였다. 즉, 선거인명부상의 전화번호와 투표당시의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무는 이 사실은 썩 뻔 채 선거인명부 상의 010-0000-0000이런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모르겠다며 교묘히 구 당권파가 유령 전화번호를 대량 등록한 거 아니냐? 하는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박무가 이를 모를리 없으나 구 당권파를 공격하기위해 언론의 입맛에 맞는 별의별 궁리를 다 짜낸 것이다.

통합한 뒤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채 총선까지 겹친 상황에서 또, 양당의 당원정보가 완벽하게 통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원 포인트 당권이 허용된 상황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부정이나 있었다는 듯이 떠들어 대는 모습은 일부 광신도 집단의 부흥회 통성기도를 보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당원정보관리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것으로 바라봐야지 이것이 바로 총체적 부실, 부정의 결정적 근거다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다. 그런식으로 말한다면 몇 만명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는 왜 새로운 버전을 내놓을 때마다 수천개의 업데이트를 만들고 서비스팩을 만들어 내나? 그리고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가?

13. 신 당권파들의 이석기-김재연 사퇴공세는 정당한가?

윤금순이 사퇴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석기 당선자와 김재연 당선자에게 모든 사퇴압력이 집중되고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윤금순 사퇴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끌어 내리기 위한 물귀신작전, 그리고 부정선거 시비에서 살짝 비켜나가는 동시에 혁신의 주체세력으로 극적 탈바꿈 하기위한 인천 신당권파의 노림수였다.

이들이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이번 비례선거가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였다는 진조위의 조사결과에 기인한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였다면 그 선거에 참여한 후보들과 당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지 왜 특정인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1,2,3번 외에 전략명부로 당선된 김제남, 정진후, 박원석은 이번 선거 시스템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러서 당선됐다는 것인가? 경쟁명부만 사퇴한다는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청년비례가 경쟁명부인가? 청년명부는 자체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김재연 후보에 대해 이번 전략명부 후보들과 같이 찬반투표로 진행되었다. 자체 선거시 낙선한 일부후보들이 소스코드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사결과 조작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나아가 진조위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청년비례와 관련된 사항은 한 줄도 언급된 적이 없다. 즉, 신 당권파가 자신의 주장의 정합성을 획득하려면 최소한 비례선거에 출마한 전원 사퇴를 주장했어야 한다.

이들이 자신들의 의도가 너무 뻔히 드러날까봐 낙선한 신 당권파측 후보들을 사퇴시키면서 이석기-김재연 후보 사퇴를 압박 했는데 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 사람들이야 사퇴를 하든 말든 이미 낙선한 사람들로써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일 뿐이다. 더군다나 서기호, 강종현은 전략명부 후보이니 남겨놔야 한다?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

이쯤 되니 신 당권파 측도 자신들의 주장이 궁색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건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희생양론이다. 국민여론이 이러하니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사퇴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논리로만 보면 그럴싸한 주장이지만 이 또한 자세히 뜯어보면 야비한 주장이다. 총체적 부정선거라면서 실제로는 구 당권파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게 부정혐의를 덮어씌우는 언론플레이를 해놓고 이제 와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사퇴하라니...너무도 야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면서도 당 혁신을 위해 출당조치, 국회제명까지 운운하며 기를 쓰고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제거하기 위해 난리를 피우는 목적은 사실 다른데 있다.

그것은 작게 보자면 노회찬 원내대표 만들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의원구성으로는 구 당권파의 김선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제남, 정진후 당선자가 무당파에 가깝고 이들이 부담 때문에 기권한다고 치면 이석기-김재연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내대표가 왜 중요한가? 6월 국회가 개원되면 비대위 보다는 원내대표에게 당의 무게중심이 쏠릴 수 밖에 없으며, 언론의 노출빈도도 원내대표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당원들과 국민 여론도 점차 냉정을 찾고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 사리분별을 하고자 할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신당권파에겐 너무도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당권을 다시 구 당권파에게 넘겨주고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사태를 주도했던 자들은 물론 당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 비대위 구성원 모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상황이 와도 지금처럼 언론이 1면 톱으로 구 당권파를 쳐줄 것인지는 장담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언론이 1년 내내 진보당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측면도 있다. 그동안 자신들이 구 당권파와 이석기, 김재연 후보를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아왔는데 이들을 제거해야만 총체적 부정선거로 드러난 구약(?)을 털고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기본 논리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당권파들의 이석기, 김재연 사퇴 공세야 말로 자신들의 야비함과 꼼수를 드러내는 결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신 당권파들은 이미 이석기, 김재연, 당권파 제거를 위한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줌비로 돌변했다. 이정미가 브리핑에서 부인했지만 민주당, 한나라당에 국회차원에서 이석기, 김재연을 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당내 출당 처리가 절차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6월 국회에 등원을 막을 뽀족한 수가 없기에 이제 민주당, 한나라당에게까지 찾아가 국회2/3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제명해 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이걸 거의 실성한 인간들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사실은 민주당쪽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온 증언이다.

14. 점차 드러나고 있는 당 사태의 본질

신 당권파측에서 이 사태를 패권대 민주주의와 상식의 싸움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좀 낮간지러운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상식이라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닌 광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패권으로 말하자면 소위 신당권파야 말로 패권을 부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표단도 우세, 전국운영위도 우세, 중앙위도 우세등 모든 당의 의결기구에서 소위 신당권파가 다 우세인데 누가 당권파고 누가 비당권파인가? 당의 주요 의결단위인 위 세 기구의 5월2일 이후의 운영과정을 지켜보면 그야말로 누가 패권파고 누가 민주주의 파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금 강기갑 비대위에 4파가 합쳐져 있지만 이들 모두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자 당권에 눈이 멀어 있는데 구 당권파가 퇴장하고 나면 서로 사이좋게 당권을 나눠가질 것인가? 그건 볼 필요도 없이 자기들끼리 또 패싸움 하게되어있다.

한번 사육에 눈이 뒤집히면 적과의 동맹도 주저하지 않게 된다. 5월2일 이후 소위 신당권파들이 조중동 비판하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조중동이 중복좌파를 제거하고 진보당을 건전한 진보정당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혼수를 두는 것을 보더라도 이들의 이해관계는 확실히 동맹수준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중동 입장에서는 지금 구 당권파를 제거하는 것이야 말로 야권연대 파괴를 통한 박근혜 당선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최소 구 당권파를 제거하지 못해도 이들을 중복, 부정선거 주범, 폭력세력등의 틀에 가둬 놓을 수만 있다면 야권연대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구 당권파 제거 이후 진보당은 신 당권파의 속성상 자체분열 할 수 밖에 없기에 신 당권파의 자백과 이에 근거한 구 당권파에 대한 파상공세는 일타 삼피의 입이 귀에 걸리는 패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태는 결코, 절대 우연히 벌어진 사태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쿠데타 주모자들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당권찬탈 음모이기도 하지만 당권찬탈은 쿠데타 주모자들의 목적일 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근본 목적은 당 해체와 정권 재창출에 있는 것이다.

15. 쿠데타의 숨겨진 주모자들과 당의 우경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당내 각 정파의 핵심들이 모여 있는 전략 기획실이 있다. 전략 기획실내 구 당권파를 제외한 신 당권파 우두머리들이 모여 이 모든 사태를 모의하고 흥계를 꾸렸다고 할 수 있다. 당 전략기획실 신당권파 모임이 바로 이번 쿠데타의 총본산인 것이다. 지금 강기갑 비대위의 면면을 봐도 이번 사태를 모의했던 전략기획실 인사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권태홍, 이정미, 이홍우...정대연 대신 민병렬이 강기갑 비대위에 들어간 것은 울산 내부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성희는 뒤로 빠져 실질적인 막후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쿠데타의 주모자들은 앞으로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비대위내 쿠데타 주모자들은 앞으로 당의 노동중심성, 진보성을 제거하고 개혁성향의 자유주의적 정당으로 당을 개조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먼저, 강기갑 비대위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뭉개고 가려 하고 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한다면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쿠데타 주모자들의 입장에서는 조사해 봐야 나올 것이 별로 없을 뿐더러 신당권파 후보들의 부정행위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자신들이 벌인 행위가 탄로 날 텐데 재차 진상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강기갑 비대위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진상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지금 이와 관련한 어떠한 준비도, 입장도 없다.

다음, 강기갑 비대위는 또한 6월 국회 개원 전 까지 신속하게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제명하고 나서 노회찬을 원내대표로 삼아 비대위-원내대표체제로 완전히 당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당권을 잡기위해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폭로하며, 동료가 분신을 해도 털끝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들이 앞으로 될 짓은 못할까?

다음, 6월말 당직선거 또한 뭉개고 가려 할 것이다. 선거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까봐야 아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들끼리 연대를 했다 해도 선불리 승리를 장담 할 수 없는 것이다. 신 당권파 입장에서 이길지 질지 확실치도 않은 당직 선거 보다는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비대위 체제를 연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신 당권파가 통과시킨 소위 당협, 당규상으로는 6월이 되면 전국 운영위는 소멸되고 숫자상 압도적으로 유리한 중앙위, 당대표의 권한을 승계하는 비대위원장은 유지된다. 즉,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처럼 강기갑 비대위가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데 구태여 당직선거를 통해 당권을 내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려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월 말 당직선거를 치르려면 그들이 주장한 대로 당 선거 시스템을 공정한(?)업체에 맡겨 새로 짜야하는데 프로그램 짜고 테스트 하는데만 두 달이상 걸린다. 그런데 이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당원 전수조사를 통한 선거인명부도 작성 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유령당원 문제를 꺼내고 나서 이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거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은 이와 관련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강기갑 비대위의 쿠데타 주모자들은 자신들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비대위 체제를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연말 대선까지 끌고 가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강기갑 비대위 체제하에서 당의 우경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언제부터 조중동과 언론이 진보정당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진보정당을 아끼고 사랑해서 중복의 물을 빼고 건전한 진보정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느니 하는 애정어린 훈수를 한단 말인가? 강기갑에 대해 어젯날에는 공중부양신공, 벽타기 신공 한다며 비아냥대던 자들이 오늘에 와서는 강기갑이야 말로 진보와 양심의 정기차로 추앙(?)하고 있으니 이를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울산, 인천을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실세들인 유시민, 권태홍이 당권을 잡은 이상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진보정당이 되려면 일단 만약의 근원(?)인 구 당권파부터 제거하고, 구 당권파가 만들어 놓은 이념적 색채부터 지우는 한편, 노동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진보정당의 마지막 보루인 진성당원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강기갑 비대위에서 심심찮게 앞으로 당직, 공직 선거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50%를 반영해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성당원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구 당권파의 입장에서 10년 공들인 진보정당 운동이 쿠데타 주모자들과 여기에 부화뇌동한 일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것이다. 박영재 당원의 심정도 이랬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한번 종파를 하고 한번 기회주의를 한 자들은 그 습성을 버리기 어려운가 보다. 자유주의자 유시민 가는 길에 깨지지 않은 당 있더냐? 하는 일부 네티즌의 자조 섞인 말에 공감만 간다. 급속한 우경화 바람속에 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당이 아니라 실체도 불분명한 서구유럽식 자유주의적 시민정당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진보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은 사라지게 되며, 장기적으로 봐서 이전부터 유시민이 구상하던 진보-개혁 대통합 즉, 민주당으로의 흡수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 참여당쪽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초 조준호 진상조사위 활동당시 유시민이 경기지사 출마 내지는 탈당 후 제3지대 가설정당(문성근이 주장했던 것과 같음) 건설을 고민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진상조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시 탈당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겁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제3지대고 뭐고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당의 우경화의 종말은 결국 ‘진보정당의 소멸’ 또는 ‘민주당으로의 흡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62158

5. “진보는 필요 … 말로만 진보, 행동은 그렇지 못해”

[중앙일보] 2012.05.15

최장집 교수가 본 진보당 사태

진보정치학자 최장집(69·사진)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진보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4일 전화 인터뷰에서 진보당 당권파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를 “시대착오적”이라며 “진보세력이 타도하려 했던 군부독재 권력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나.

“일부 진보정치세력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번 당권파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다. 진보세력이 정당성을 잃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부응하지 못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바람에 진보세력이 정당성을 잃었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나.

“진보세력들이 민족과 통일 같은 거대한 이념·가치에 매몰돼 왔다. 그러다 보니 타협과 공존 같은 공동체적 가치, 공정한 선거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했다. 진보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 놓고서는 그 후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에 맞게 스스로의 행태를 바로잡는 데 실패한 셈이다. 이런 식이면 그들이 타도했던 군부독재와 뭐가 다른가. 방식은 다르지만 민주주의를 무시한다는 점에선 다를 바 없다.”

- 진보정치란 어떠한가.

“진보정치는 필요하다. 진보를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진보의 역할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늘 성장과 분배의 문제, 빈부격차와 소외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진보다. 우리의 진보세력이 과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말로만 진보였지,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 진보가 진보정치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 이번 사태는 진보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 당권파, 혹은 주사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민족이나 통일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정치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어느 나라에나 극소수의 지지를 받는 정치집단은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든 민주주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 진보정치를 위한 조언을 하자면.

“진보정치세력이 벼랑 끝에 섰다.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진보는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민족이나 통일의 문제가 민주주의 가치를 초월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번 사태는 그런 생각의 필연적 결과다. 진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돼선 안 된다.”

6. [칼럼] 진보쟁기, 고립주의와 결별하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민중의 소리/ 2011-09-23

〈민중의소리〉 칼럼니스트인 한호석(56)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면서 통일학과 한반도 정세분석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범민련 채미본부 사무국장, 6.15미국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저서로는 〈평양회담과 연방제통일의 길〉(2000년),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향하여〉(2005년)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합당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논쟁과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양당 합당을 반대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린다.

양당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을 배제하고 진보신당 통합파와 통합해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파가 합하면 아주 손쉽게 통합진보당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 합당도 실패한 주제에, 만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파가 합한다고 한들 그런 모습으로 출현한 정당에게 대중이 얼마나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관심과 지지는 고사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식의 냉대나 받을 것이다. 어쩌면 냉대조차 받지 못하고 관심 밖으로 아예 밀려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보정치는 정파들끼리 모여앉아 수군덕거리는 ‘골방정치’가 아니다. 진보정치는 진보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고,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실현해야 하는 대중 자신의 정치다. 진보정치의 주인은 대중이다. 만일 각계각층 대중으로부터 냉대와 무관심을 받는 진보정치가 현실 속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진보정치가 아니라 진보의 깃발을 든 고립정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시야를 넓혀보자. G20에 속한 나라들의形形色색 좌파정당들이 각기 자국 대중으로부터 냉대와 무관심을 받으며 고립되어 있는 한심한 처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좌파정당사 100년을 헤아리고, 나라가 분단되어 있지도 않고, ‘국가보안법’으로 짓눌려 있지도 않은 G20 나라들의 좌파정당들이 왜 그 모양일까? 불우한 좌파정당들의 실패경험은, 이른바 좌파정당의 독자적 성장발전론이라는 교조(dogma)를 신주 모시듯 떠받들고 대중과 불통하면서 대중으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였기 때문이다. 교조가 좌파정당에게 들쭉은 고립주의가 좌파정당과 대중을 분리시키고 좌파정당을 왜소무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만일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이 각계각층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한나라당과 힘을 겨루는 제1야당이려면, 양당 합당은 논할 필요가 없고 각자 독자적 성장과 발전을 꾀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창당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노동당은 어느 정도까지만 저성장, 저발전한 뒤에 정체되었고, 앞으로도 더 이상 성장발전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G20 나라들의 좌파정당이 겪은 100년 실패경험과 민주노동당의 10년 정체경험은 독자적 성장발전론이 정치현실에서 동떨어진 교조였음을 말해준다.

진보는 교조가 아니다

진보는 독자적 성장발전론으로 분철한 교조가 아니다. 진보야말로 허위의 분철을 벗겨내고 그 속에 웅크린 교조를

꺼내 폐기처분하는 것이다. 진보정치가 추구하는 자기 혁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진보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합당은 연합전선의 혁신적 실현이다. 연합전선론에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간략히 부연설명을 하면, 연합전선론이란 이질적인 정치세력들이 합하여 더욱 크고 강력한 정치적 실체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해명하는 정치이론이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합당이 연합전선의 혁신적 실현으로 된다고 말하는 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요구된다. 원래 민주노동당도 독자적 성장발전론이 아니라 연합전선론에 의거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건설되어야 하였지만, 11년 전 창당주역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운동권 정파들이 결집한 정파연합당을 건설하였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11년 전 당시 민주노동당 창당주역들이 연합전선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운동권 정파들이 결집한 것도 일종의 연합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파연합전선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그런 식으로 창당된 정파연합당이다. 민주노동당은 대중적 진보정당도 아니고 진보적 대중정당은 더욱 아니며, 진보적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정파연합당이다.

그런데 그 정파연합당은 10여 년이 지난 오늘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을 기약하지 못하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 한계를 돌파하는 길은,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연합전선을 혁신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파연합당의 낡고 왜소한 틀을 버리고 진보적 대중정당의 새롭고 건장한 틀을 세우는 자기 혁신이다.

본디 연합전선이란 정치이념이 대동소이한 정치세력들이 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이 합하는 것이다.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이 합해야 하는 까닭은, 그렇게 해야 대중과 소통할 수 있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고,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이질적인 정치세력들이 대중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함으로써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연합전선의 절묘한 이치다. 자기, 타자, 대중의 공동목적, 이 3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견인, 타협, 절충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통합과정을 이해하여야 연합전선의 절묘한 이치를 알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참여당은 정치이념이 서로 다르지만, 연합전선론에 의거하여 합당할 수 있고, 또 합당해야 마땅하다.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합당해야 자기 혁신을 실현하는 것이지, 정치이념이 대동소이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파가 합하면 또 다시 정파연합당의 낡고 왜소한 틀에 갇히는 꼴이 될 것이다.

한편, 연합전선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쪽의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합당할 수 있다면, 왜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3당 합당은 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간명하다. 상대적으로 당세가 너무 큰 민주당까지 포함하여 3당 합당을 하는 경우 자기, 타자, 대중의 공동목적 3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견인, 타협, 절충이 막히고, 민주당 안으로 다른 두 당이 흡수통합되어 종당에는 민주노동당 출신 세력이 변질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명백하게도, 흡수통합은 연합전선이 아니다.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3당 합당을 거부하는 견해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양당 합당을 요구하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연합전선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양당 합당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정당이 진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우경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연합전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꺼내놓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양당 합당은 어느 한 쪽으로 우경화 또는 좌경화되는 변질이 아니라, 연합전선의 원칙과 방도에 따라 견인, 타협, 절충하는 것이다.

견인, 타협, 절충으로 실현될 양당 합당은 고립을 털고 대중에게 다가서는 전진이며, 정체를 벗고 발전을 추동하는 변화이며, 낡고 왜소한 틀을 버리고 교조를 타파하는 혁신이다. 그와 정반대로, 고립주의자들이 안주하려는 정파연합당의 낡은 틀은 대중이 떠나버린 고립이며, 성장과 발전이 멈춘 정체이며, 자기 혁신에 등돌린 교조다. 민주노동당의 10여 년 정체경험이면 족하지, 언제까지나 정파연합당의 낡고 왜소한 틀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몰이해인가 아니면 억지인가.

독자적 성장발전론의 낡고 왜소한 틀을 깨뜨리라! 연합전선을 배제하는 정파적 고립주의와 결별하라! 그리고 진보 정치의 주인인 대중에게 다가서라!

7. 통합진보당, '진보당' 개명...당권-대권 분리 없애

6월 당대표 선출에 관심...당대표 외 7인 최고위원 체제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2012-04-24

통합진보당이 당명을 '진보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당헌·당규 개정위원회는 개정 당헌 초안에서 당의 명칭을 "우리 당은 진보당이라 한다"고 명시했다. 54년만에 진보당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셈이다.

통합진보당은 통합 이후 초기부터 '우리 당의 약칭은 통진당이 아닌 진보당'이라 주장했으나, 진보신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진보신당은 '진보당'이란 명칭이 '진보신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이같은 약칭 사용이 허가되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은 이유로 통합진보당은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4.11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 미만을 득표해 선관위 등록이 취소되면서 이같은 제한이 풀리게 됐다.

정당법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10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취소된 정당의 이름은 취소일로부터 다음 총선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 진보신당이 옛이름을 다시 쓰고자 해도 2016년 총선까지는 불가능하다.

'진보당'은 원래 이승만 정권 당시인 1956년 조봉암에 의해 창당된 혁신계열 정당이었으나 창당 15개월 만인 1958년 2월 정부 공보실(현 국정홍보처)에 의해 등록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진보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했고 조봉암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당했다.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인 야당 탄압이며 사법살인 사건으로 꼽힌다.

당대표 외 7인 최고위원 체제로...당·대권 분리조항 빠져

통합진보당은 새 당헌을 통해 당 대표 외에 7인의 최고위원을 두기로 했다.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과 지명직 2명이다. 당의 최고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는 여기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더한 9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기구로는 당대회와 중앙위원회를 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권과 대권 분리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당 대표 직함을 가지고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당 내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구 민노당계 당권파에서 당 대표와 대선후보직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당 대표는 당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며, 대선 후보 역시 개정 당헌 초안 47조에 따르면 당원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당권 및 대권 주자로는 민노당 출신의 이정희 공동대표, 진보신당 출신인 심상정 공동대표와 노회찬 공동대변인, 국민참여당 출신의 유시민 공동대표 등이 거론된다.

한편 당헌 초안과 함께 발표된 강령 초안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 운동과 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 민중항쟁,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규정했다. 강령 중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 폐기"한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통합진보당은 다음달 13일 중앙위원회 의결로 새 당헌과 강령을 확정한다. 이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새 지도부 선출 투표를 거쳐 6월 3일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게 된다.

8. 연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조건부 철회

- 혁신비대위 중심으로 쇄신안 관철 촉구 -
- 민주노총 자기혁신 위한 제2정치세력화 특별기구 설치 -

1.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이 공당으로서 절차적 정당성과 자정능력이 훼손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 민주노총은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이 노동중심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진보정당의 길에서 이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3.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이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충지를 모아 신속히 혼란을 극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1,600만 전체 노동자의 준엄한 명령임을 깊이 각인하기를 요구합니다.
4.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이 노동중심성 확보와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합니다.
5. 민주노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조직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며, 통합진보당이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고, 노동중심 진보정당으로 거듭나 이 논의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6. 민주노총은 이번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대중적인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중단없이 추진하며, 이를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2012년 5월 1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9. 통합진보당 비례선거 관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입장

2012.5.4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후보 선거 문제는 검찰의 개입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2일 통합진보당의 진상조사 결과를 접한 당원들과 국민여러분,

많이 놀라고 실망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통합진보당의 배타적 지지단체로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어려운 현실에도 여성농민 정치세력화를 위해 2004년 민주노동당으로, 2012년 1월 통합진보당으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어온 여성농민이 정치세력화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물대포를 맞았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여성농민들의 정치세력화 결정과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신용카드 한 장 없는 여성농민은 당원 가입부터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선거철은 늘 바쁜 농사철이어서 선거운동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농사일을 뒤로 하고 민주노동당을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알려내고 지지를 얻기 위해 한 명의 농민이라도 더 만나려고 새벽부터 눈으로 밟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고령의 여성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정말 신명나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농민에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정치,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 우리에게 윤금순이 있었습니다. 겨울밤, 차 창 밖으로 몰려오는 함박눈에 시야는 흐렸지만 식량주권을 지켜낼 의정활동을 온 마음에 품고 눈길을 달려 여성농민들을 만났습니다. 호미 대신 전화기를 들고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땅을 일구는 마음으로 국회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농민의원 한 명 만들자고 당원 한 명 한 명 성심을 다해 만났습니다. 온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밥상을 당원들과 이야기 하였습니다. 삭발과 단식, 쇠사슬도 마다하지 않고 매 시기 투쟁의 포문을 열어왔던 여성농민의 힘을 모아 기적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성농민들의 힘으로 윤금순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비례후보 1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며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로 세 살을 도려내고 애틋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에 호소합니다.

먼저, 통합진보당의 당대표단 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당대표단은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가장 무거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통합진보당이 새롭게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봉합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을 다시 건설하는 재창당 수준의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힘을 모아 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에 관련된 실무적 책임이 있는 사무총국 또한 사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위 경선에 참여한 비례후보 전원이 사퇴해야 합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경선 자체가 투표한 값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모여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윤금순 후보를 조직후보로 결정하고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 기대와 희망에 들떠 농민 국회의원 한 명 만들자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보내준 농민들의 얼굴도 어른거립니다. 우리 전국 여성농민들의 진정성이 전해지지 못한 채 농민과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여농 윤금순 후보는 어떠한 부정과도 무관하기에 후보에 대한 그 어떤 부정의 의혹이나 흠집내기에 관련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요구안이 꼭 받아들여지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스팔트 농사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정치, 진보의 가치가 실현되는 통합진보당 재창당이 바로 여성농민들의 바람입니다.

지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나 한-중 FTA 개시 선언,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KTX 민영화 등 우리가 투쟁하고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통합진보당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온 힘을 다하여 통합진보당 재창당과 쇄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통합진보당의 윤금순 당선자입니다.

저는 지금껏 농사지며 농민운동, 여성농민운동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농민을 대표해 전여농의 후보로 추대되어 출마하였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유일한 농민의원 당선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파문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국민여러분들께 많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저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조직후보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같이하며 당선자로서 저 자신도 함께 책임질 것임을 밝힙니다.

10. '민주노총이 혁신주체? 백배 사죄해야'

주사파만 척결하면 돼? 소가 웃을 일

[노동과 희망] "노동운동, 정당정치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임영일

레디앙/ 2012년 5월 21일

통합진보당 사태가 첫 고비에 달한 듯하다.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출범했고, 이제 '구' 당권파가 된 세력들은 '당원 비대위'를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시즌 2'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바꾸자"는 입당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도 모두 촉각이 곤두섰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거의 모든 언론들과 유명 논객들도 이런저런 혼수두기에 바쁘다.

이 모두의 시선이 통합진보당의 '최대 주주(?)'인 민주노총으로 집중되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16일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김영훈 위원장에게 크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장면이 모든 언론에 올랐다. 강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 통합진보당에 대거 들어와서 당의 주체로서 혁신하고 개혁"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의 대답은 17일 중집회의 결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은 '조건부 지지 철회'였다. 일단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되, 혁신비대위의 조치 결과를 보고 이후 재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내에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통합진보당이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고 노동중심 진보정당으로 거듭나 이 논의에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혁신비대위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일겠다"고 밝혔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정치조직인 통합진보당 문제 수습의 주체로 나섬으로써 혁신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사태 해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 민주노총

그러나 이 과정을 보는 내 마음은 사실 매우 불편하다. 나는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이며, 따라서 통합진보당 지도부 못지않게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조직의 지도부들이 우선 그 조합원들 앞에 머리 숙여 백배 사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두세 가지만 적어보자.

첫째, 이번 4.11 총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통합민주당과 사실상 '일심동체'로 움직였다. 내부 반발 때문에 '배타적 지지'만 유보했을 뿐, 반MB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기조, 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전면적 지지,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에 대한 집중 투표, 이를 위한 재정·인력의 대대적인 지원 등이 있었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공동의 책임 주체들이다.

둘째, 이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거가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였다면, 민주노총 역시 그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예컨대 총연맹은 조합원 2만여 명에 대한 'ARS 전화여론조사'라고 하는 희한한 방식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집중적 지지를 결정했다. 한 산별노조는 전직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의 비례후보로 선거에 나서면서 조합원 4,500명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켜 이들의 집중 투표를 꾀했다. 이석기 후보가 아니라 실은 이 산별노조의 후보가 '동일 IP' 투표비율 1위였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셋째, 통합진보당이 노동 혹은 노동의제를 배제 내시 경시하여 민주노총이 화가 났다는 것도 많이 어긋난 이야기다.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를 '묻지 마, 반MB', '묻지 마, 야권연대', '묻지 마, 집중투표'의 기조로 임했다. 여소야

대를 당연시하고, 여소야대만 되면 “한 번에, 10가지 노동의제를, 100일 안에(1-10-100)”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이자 2012년 투쟁 방침 아니었나?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노동의제 실종 타령은 생똥맞고, 민주노총 출신이 후보 내지 당선자가 못 된 것에 대한 불만이라면 좀, ‘거시기’하다.

조직 민주주의 문제, 이미 노동운동 전체에 만연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 이번 사태의 발단이 진보정당에서의 ‘조직 민주주의’의 실종에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야단칠’ 지적이 있나? 없다는 걸 다 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선거는, 특히 지역본부나 산별 등 상급조직들의 집행부 선거는, 조직 민주주의가 점차 실종되고 ‘패권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있는가?

투표함을 열었더니 ‘무더기 표’가 나오더라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였나? 부정투표 시비로 법원까지 갔는데, “문제는 있었으나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겨우 면죄부를 받았던 조직이 어디였더라? 지금도 선거 시비 여파로 본부장이 공석인 지역본부는 어디라더라?

정파 이야기들을 한다. NL이니 PD니, 경기동부니 울산연합이니, 좌파니 우파니 중앙파니, 그러더니 어느덧 “주사파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버린 듯하다. 소가 웃을 일이다.

노동운동의 지도부, 간부, 활동가들에게 물어보자. 이번 기회에 주사파만 척결하면 우리 노동운동이, 노동정치=진보정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나? 아니라는 것 다 알지 않는가?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어떤 정파였는지 몰라서 통합하고 지지했는가? 통합이 만나 틀리나 싸울 때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신자유주의 세력과 통합해도 되나, 안 되나가 아니었나? 혁신비대위가 조직을 ‘혁신’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노동운동, 정당정치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 중심의 정치운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지금은 일단 멈추어야 할 때이다. 노동정치=진보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대중조직이 망가지고 있었던 데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밑바닥이 엉망인데, 그 위에 무슨 아름다운 집을 또 짓자는 것인가?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면 정치를 만들 수 있는가? 누군가 나서서 새 깃발을 들면 사람이 모이나? 그러면 새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가?

아쉽고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인 듯하다. 당을 새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길이 다시 보일 것이다. 노동정치의 복원을 말하기 이전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그 교두보들을 먼저 건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곧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곧 보궐선거도 있을 것이고, 곧 지자체 선거도 있을 것이니 자꾸 마음이 급한가?

급할수록 돌리가라 했다. 굵은 상처의 뿌리를 들어내지 않고 봉합하면 더 크게 굵을 뿐이다. 불구경하다가 보파리 잃는다고 했다. 남을 탓하기 바쁘다 보면 내 눈의 들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돌부리를 탓하기보다, 차라리 자빠진 김에 쉬어 가자고 했다. 천천히 함께 가야 멀리도 가고, 그게 빨리 가는 길이라고도 했다. 우리가 애들이냐고? 그럼 지금 우리가 애들보다 더 나은 생각을,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2주제 : 노동자 정치운동의 진로 :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1.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칙과 방향

노동자혁명당(추) 입장

2012/01/12

양효식

이번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최종 파산을 맞았다. 이미 전부터 민노당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불모로 하여 민주대연합/야권연대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열망을 배신하고, 노동자계급을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의 들러리로 전락시킨 데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더니 이제 마침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허울마저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자본가 정당과 아예 통합하는 길로 가버리자 급기야 민주노조운동 내부로부터 배신에 대한 분노와 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 간부 활동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1천인 선언운동'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 서명을 조직하고 1월 14일 선언자 대회와 1월 31일 민주노총 대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천인 선언운동은 1월 5일 기자회견 선언문을 통해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므로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정치방침을 새롭게 정립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가 정당과 독립하여 노동자의 이해를 일관되게 대변해야 함을 주장해 왔고 또 그렇게 투쟁해 온 사회주의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선언과 제안을 환영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운동이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투쟁 일선에 있는 모든 노동자 투사들 사이에서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분투할 것이다.

먼저 당면한 과제로서, 우리는 1월 31일 민주노총 대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안이 철회되도록 '1천인 선언운동' 참가자들을 비롯하여 배타적 지지 반대투쟁을 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공동전선을 펼 것을 호소한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일 대대장에서 필요한 모든 행동을 펼쳐야 할 것이고, 한편 이를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대대 전까지 조합원들 사이에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서명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조직해야 한다. '배타적 지지 반대' 공동투쟁을 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러한 대중적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자.

다음으로, 대대 대응만이 아니라 대대 이후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데 대한 근본 평가와 함께, 어떠한 원칙과 방향 위에서 다시 새롭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를 조합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조직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과 일선 계급투사들이 평가와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공장별 각급 대중단위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 및 집회 선전전 등 다양한 정치캠페인을 펼치자.

* * *

이하에서는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그 동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 및 현

시기 정세적 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점에서 제기해 본다.

기본 원칙과 방향

첫째,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열망은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극복하고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계급적 정치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하고 만 것은 이미 국참당과의 통합 이전부터 이러한 열망을 배신하고서 민주대연합/야권연대로 자본가 정당과 손잡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시켜 온 데서 비롯한 것이다. 진보정당 지도부들이 민주당 국참당과 함께 하는 ‘야5당 중재단’ 등을 통해 노동자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오면서 이미 진보정당 운동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국참당과의 통합은 이러한 자본가 정치세력에 투항해 온 일련의 배신 과정의 종착점일 따름이다. 따라서 자본가 정당과의 단절은 민주대연합/야권연대와의 단절로까지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는 당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현 민주노총처럼 노동조합이 민주대연합과 야5당 연대(‘정척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선대본 참가나 지자체 공동정부 구성까지)를 지지하고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것은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금속, 공공 등의 산별노조 및 연맹, 그리고 대공장을 비롯한 단위노조들에서도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은 조합 지도부들이 야권연대를 지지하는 것을 비판, 탄핵하고 이러한 계급협조에 맞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들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가 노동자들의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조합을 야권연대의 꼬리로 전락시키는 조합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에 맞서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을 바로세우는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둘째, 의회주의와 ‘양날개 전략’을 극복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그 동안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것은 상층 명망 인사들을 국회와 지자체에 당선시키는 것으로 노동자 정치가 왜곡되고,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들을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들러리로,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킨 데 있다. 96-97 노개투 정치총파업처럼 노동자들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가릴 것 없이 모두 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힘 있게 전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정치투쟁은 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각각 나누어 맡는다는 이른바 양날개론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투쟁을 방기하고 대리주의로 일관하는 의회주의와, 정치투쟁 및 계급적 연대와 담쌓는 조합주의를 재생산해 왔다. 이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왜곡되고 후퇴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해방의 가치와 혁명의 전망이 상실되고 민주노조운동도 관료화와 개량화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99% ‘점령하라’ 운동에서 보듯 대중들의 반자본주의 정서와 혁명적 상상력이 솟구치고 있고, 그로부터 대중 직접행동과 대중총회 같은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함께 기존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의회 대리주의 및 관료화된 공식 노조운동에 대한 환멸 속에서 그것들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대안적 운동으로 나온 것이다.

한국에서도 관료화되고 박제화된 공식 노조운동을 넘어 대중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직접행동이 희망버스 희망텐트 운동, 촛불시위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조의 지침 없이도 기륭, 동희오토, 흥익대청소, 한진, 재능, 쌍차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연대운동이 펼쳐져 왔다. “정리하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이 감히 내걸지 못했던 슬로건과 요구들을 과감히 제기하고 있다.

그 주된 성격에서 기층 프롤레타리아 운동인 이 운동들은 현재 야권연대 세력들이 ‘반MB 정서’를 내세워 대세 몰이하고 있는 선거심판론에 대한 현 시기 적극적인 투쟁 대안들이다. 이 운동들이 공식 노동조합 체계 밖에서 노조 지침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운동이라는 이유로 ‘노동운동’과는 상관없고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일 주체일 수 있음을 부정하는 편협한 조합주의는 올바른 노동자 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 지난 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

중 하나인 양날개 전략 같은 것에 다시 문을 열어놓는 관료적·조합주의적인 정치세력화와는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의회주의와 양날개 전략, 반MB 선거심판론을 걷어내고,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운동들이 총파업 등 조직노동자들의 대중투쟁과 결합하여 자본주의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노동자혁명의 전망을 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셋째, 선거방침을 정치원칙과 정치방침에 종속시키고, 2012년 공황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총파업 조직을 통해 수세를 공세로 전환시켜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은 어떻게 노동자가 정치(투쟁)의 주체가 되고, 어떻게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설 것인가 하는 정치원칙을, 정세를 매개로 하여 해당 시기의 정치투쟁의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거는 이러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투쟁의 수단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따라서 매시기 총선, 대선, 지자체 선거 등 각각의 선거방침은 이러한 정치방침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때그때 실용적인 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대중투쟁을 선거에 종속시키고, 의식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자본가 정치세력화도 야합하는 의회주의는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방침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은 모두 선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주의와 선거주의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노동자가 선거에서 어느 당을 -- 그것도 의회주의 정치세력들 중에 -- 지지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협소화되고 있고, 나아가 배타적 지지 방침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묻지마 지지’로까지 왜곡되고 있다. 의회에 진출해서 다수당이 되는, 의회주의적 선거주의적 목적을 위해 오직 그 존재 이유가 있는 ‘배타적 지지’는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이 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말할 것도 없고, ‘배타적 지지’ 그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선거방침이 정치방침에 종속되어야 한다면 선거방침에 대한 각급 노동조합 단위에서의 토론을 단순히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의 문제로 제한하지 말고 현 시기 노동자 정치투쟁의 과제, 정세와 투쟁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2012년 정세적 대중투쟁 과제에 복무하며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앞당기는 선거투쟁 목표와 요구들을 정식화하고 총대선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2012년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공황이 격화하고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가 전면화함에 따라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대중투쟁으로 촉발되느냐를 가르는 정세일 것이다. 2012년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러한 정세 속에서 만들어야 하며, 정세의 과제를 어떻게 받아 안느냐에 따라 그만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2012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설사 현재로선 구호에 그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2012년 정세의 엄중함 때문에 누구도 총파업 성사 어려움을 들어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세적으로 총파업이 절실하다. 2012년 예상되는 자본의 총공세를 개별 투쟁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면, 정치총파업으로 그 동안의 패배와 수세를 일거에 만회하고 정세 반전을 일으켜내야 한다. 자본주의 정치·경제 위기가 가속화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저항이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정치총파업을 성사시켜 대대적인 반격의 물결을 일궈내야 한다.

2.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치방침

2012.2.10

공공운수노조연맹 정기대의원대회 결의

1. 기본방침

: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변혁 및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장과 지역에서 일상적인 대중정치투쟁으로 노동자 중심성을 분명히 하는 진보정당 운동을 강화하고 진보정치 통합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하면서 제출된 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추진한다.

- 1) 민주노총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각 산별노조 및 연맹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의 방향 및 과제 설정을 위해 폭넓은 현장 토론을 조직한다.
- 2) 현장과 지역의 일상적 대중정치투쟁을 기본으로 선거투쟁과 의회투쟁을 결합하여, 그 성과가 노동자의 정책적·정치적 요구의 실현 및 민주노조운동의 확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3)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추진을 위해, 노조·연맹의 일상적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을 담당하는 상시적 정치실천단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가안, 이하 추진위 혹은 공공운수 추진위)'를 설치한다. 추진위의 방향과 과제 및 세부적 운영 방안은 조직적 토론을 통해 구체화시켜나가도록 한다.

3. 번역적 연상실천과 번역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국 활동가 모임을 제안하며

- 무너진 노동현장의 전국적 투쟁을 강화하고, 사라진 노동 정치를 복원시켜 노동자 계급정당을 세우기 위한 급속 현장 노동자들의 제안 -

1. 통합진보당 사태의 진짜 원인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 선거와 폭력사태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믿었던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노동자들도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진보언론조차 “소름 끼치고, 추악하고, 파렴치하고, 끔찍하고, 참담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광풍이 민생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무리들의 추악한 비리와 범죄 행위들이 기억에서 잊혀지고, 이명박 정권과 탐욕의 재벌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를 비롯한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고통도, 현대차 비정규직과 재능교육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도, 구럼비를 살려달라는 제주의 절규도,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를 막기 위한 어린 벗들의 촛불의 노래도, MBC를 비롯한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을 위한 외침도 통합진보당 사태에 가려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는 당권파만이 아니라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진영 모두를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세력들은 이를 이용해 진보정치의 싹을 자르고, 이명박 정권과 탐욕의 재벌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권파라고 불리는 구 민주노동당, 경기동부연합 세력을 몰아내고, 진보신당 탈당파와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세력이 당권파가 되면 통합진보당은 다시 국민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이 될 수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당권파의 패권주의와 권력욕,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이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인가에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총선과 국회의원 후보들의 면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항쟁을 시작으로, 용산철거민과 쌍용차 살인진압에 맞선 투쟁, 기륭전자, 동희오토, 현대차비정규직, 지엠대우, 대학청소노동자, 재능교육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다섯 차례의 희망버스 투쟁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통합진보당 후보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권 5년, 악랄한 정권과 탐욕의 재벌에 맞서 온 몸을 바쳐 싸웠던 노동자 민중들이 아니라, 민생을 외면한 채 ‘닥치고 야권연대’에 목을 매달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었던 세력들과 연대하며 권력만을 쫓았던 이들의 ‘묻지마 통합’의 결과입니다.

2. 4.11 총선 묻지마 야권연대의 비참한 결과

4.11 총선이 결과 100석도 힘들다던 새누리당은 152석으로 기사회생했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최소한 과반 이상을 예상했던 민주통합당은 127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었지만 정당지지도가 13%에서 10%로 줄었고 진보정치 1번지 울산과 창원을 모두 새누리당에 빼앗기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된 이명박 정권 4년, 노동자 서민들은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절규했지만 이명박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 상권까지 잡아먹은 탐욕의 재벌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서 젊은 층의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재벌과 900만 비정규직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내팽개치고 ‘묻지마 야권연대’에 매달렸습니다. 당선

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한미FTA를 추진한 자들, 불법 횡령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 구명운동을 벌인 자들, 재벌과 부자의 친구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야권연대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은 후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후보가 선출되고, 비례대표 후보 조작 논란과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투표조작 등 진보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탐욕의 재벌에 맞서 싸우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온 몸을 던진 사람들, 9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해온 이들은 영입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으로 여소야대를 확신하며 교만해 있던 야당들에게 재벌과 비정규직 문제는 주요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야권연대와 당선에 혈안이 된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광장, 쌍용차 22번째 죽음에 맞선 대한문 분향소,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을 외면했습니다.

선거일에도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900만 비정규직, 영세 상인들에게 투표해야 할 결정적 이유인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재벌들의 공간을 열고, 정리해고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면 새누리당의 기사희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998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탐욕의 재벌과 900만 비정규직 문제를 전 사회적 분노를 모아 해결할 수 있는 절회의 기회까지 날려버렸습니다. 4.11 총선 결과는 ‘묻지마 야권연대’의 치참한 자화상입니다.

3. 노동자 도시에서 외면당한 통합진보당

4.11 총선 결과 노동자의 도시에서 받은 통합진보당의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묻지마 야권연대’로 울산북구와 창원성산을 비롯해 5석 이상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영남권 노동자벨트의 전멸이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는 47.62%를 얻어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52.37%)에게 4천여 표차로 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8년 전인 2004년 민주노동당 조승수 후보(46.89%)와 열린우리당 이수동 후보(17.65%)가 얻은 64.54%보다 무려 16.92%나 줄어들었습니다.

창원성산에서도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는 43.83%를 얻어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49.04%)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7.12)의 표를 합하면(50.95%) 새누리당보다 많다는 이유로 패배의 원인을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이라고 주장하지만 2004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가 얻은 표를 합산하면 무려 62.18%에 이릅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지지율은 2004년 13.03%에서 10.3%로 하락했습니다. 노동자 도시에서는 더욱 치참합니다. 울산에서는 2004년 21.89%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2012년에는 16.3%에 그쳤고, 창원에서도 2004년 24.25%에서 2012년 창원위원장 17.99%, 창원성산 18.75%로 떨어졌습니다.

울산과 창원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노동자 도시인 인천은 2004년 15.32%에서 2012년 9.71%로 급락했고, 조선소가 밀집한 노동자도시 경남 거제도 2004년 26.19%에서 2012년 통합진보당은 9.93%, 진보신당은 8.48% 지지로 양당을 합쳐도 지지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공단이 위치한 평택도 2004년 16.71%에서 2012년 8.63%로 곤두박질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전략적 오류와 안일한 대응, 울산 동구와 창원에서 잇따라 벌어진 지방의원 사퇴 논란 등도 ‘노동자 도시 진보정당 전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노동자 정당의 정체성과 계급성이 사라져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장을 찾아갈 절박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비정규직법은 노동자들에게 악법의 상징이고 징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고공농성과 파업 등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해 만든 법안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많은 노동자들은 국민참여당과의 합당, 민주당과의 ‘묻지마 야권연대’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4.11 총선이 끝나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도시에서 외면당한 통합진보당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다가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마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고, '묻지마 야권연대'를 위해 한명숙 대표와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닌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여전히 '반MB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되뇌고 있습니다. 재벌과 맞서 싸우는 정당,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을 내걸고 출범한 민주노동당은 12년 만에 노동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깃발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4. 무너진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이 25년이 흘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을 뒤흔들었던 1990년대 초 전노협의 투쟁과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뒤흔들었던 1996~97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제 오래된 과거, 흘러간 노래가 되었습니다. 2006년 비정규직법에 맞선 민주노총 파업과 2007년 한미FTA 저지 금속노조 파업 이후 5년 동안 민주노총은 식물노조로 전락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의 공간에 퍼부었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특공대를 동원해 진압했으며,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민주노조를 무너뜨렸습니다. 2008년 5월 2일부터 시작돼 100일간 전국을 달구었던 촛불항쟁과 2009년 용산 철거민 학살에 맞선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투쟁의 주체와 연대세력이 아니라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 점거파업,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5일간의 점거파업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연대파업조차 만들어내지 못했고, 투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로 전락하였습니다.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309일 고공농성에도 민주노총은 무기력했고, 금속노조는 여름휴가와 선거를 이유로 연대파업은커녕 입단협조차 조기에 타결시켰습니다.

노동운동과 연대파업의 중심이었던 현대, 기아차지부는 3년 연속 무쟁의로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 투쟁을 고립시키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였으며, 성과금과 주식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조합원들과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저버렸습니다. 노동운동의 열정과 헌신성은 사라지고, 노동조합의 관료주의와 종파주의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노동운동과 함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이라는 3대 악법을 만든 세력과 손을 맞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등 뒤에서 칼을 꽂았던 사람들, 재벌의 친구들에게 투표를 강요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외면하고, 심지어 비정규직의 파업을 무너뜨렸던 자들이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버젓이 출마했고, 보수정치세력들의 부패와 협잡이 진보정치 내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5. 처절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사회변혁과 노동해방의 기관차가 되어야 할 노동운동이 무너져 내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매장되어버린 2012년, 우리는 처절한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008년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쳤을 때, 현장에서 제대로 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009년 용산과 쌍용차에서 이명박 정권의 살인진압과 학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전국적 연대파업을 조직해내지 못했습니다. 2010년 전임자 임금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라는 노조법 개악에 맞서 현장에서 파업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25일 공장 점거 파업에 온 몸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김진숙 동지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연대파업을 조직해내지 못하고, 희망버스를 함께 타는 것으로 변명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주식과 성과금을 대가로 무쟁의를 합의한 대기업노조의 노사영합주의에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집행부만의 잘못이 아니라 현장에서 온 몸을 다해 싸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현장 조합원들을 핑계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비겁했던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켜봅니다. 노동조합 집행부만을 비난하고, 다른 정파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지도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6. 변혁적 현장실천의 대행진

2012년 무너진 노동운동을 다시 복원시키고,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2.23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불붙기 시작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대공장은 물론 중소기업장에서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 사업장, 우리 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둘째,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정리해고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쌍용차 22번째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전국의 사업장과 거리로 확대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동시간단축과 주간연속2교대제를 위한 투쟁입니다.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현장통제권을 자본에게 빼앗기고, 비용을 비정규직과 부품사에 떠넘기는 주간2교대제가 아니라 계급적 원칙을 지키는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투쟁입니다. 비정규 악법 철폐와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넘어 이명박 정권을 무덤으로 보내기 위한 총파업이 또 다시 뺑파업이 되지 않도록 현장과 지역에서 함께 파업을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헌신성과 열정이 사라지고 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 종파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노동조합을 바꾸는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썩어 부패하고 있는 노동운동을 현장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족쇄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과 지역의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무너진 노동운동을 현장에서부터 복원시키는 변혁적 현장실천의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7. 변혁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향한 항해

정권만 바뀌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미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이명박이 완성하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했으며, 민주당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퍼부었고, 그 결과가 2012년 900만 비정규직 지옥입니다.

무너진 노동운동을 복원하는 일과 무너진 정치세력화를 복원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동안 현장의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가 아니라 표 찍는 기계, 돈 대주는 물주의 역할에 머물렀고, 때로는 노동조합의 틀 안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무덤으로 사라지고, 출세주의자들이 장악한 진보정당은 재벌의 친구인 보수야당의 2중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정치는 자본가세력과의 타협과 협잡이 아니라 단호한 투쟁입니다. 불법파견의 주범인 정몽구, 비정규직 공장을 양산하는 자본가들을 구속시키는 투쟁입니다.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탐욕의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입니다.

우리는 노동해방을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항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실천하고, 지역에서 헌신을 다해 연대해온 노동자들,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한 활동가, 조합원들이 노동자 정치의 항해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노동자 정당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운동의 원칙을 지키며 싸워왔던 건강한 현장의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시작한다면, 새로운 노동자 정치,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

(가칭) 변혁적 현장실천과 변혁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국 활동가모임

4.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의 사퇴가 노동과 진보를 살리는 길이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총연맹인 민주노총을 향해 이런 권고를 하게 된 심정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그러나 노동정치의 실종, 언필칭 진보라 일컫는 사이비 진보가 진보를 말아먹는 현실에 모두가 눈 감고 고개 돌리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거론할 수도 없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진보를 입에 올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급조직인 민주노총을 향해 제대로 된 민주노조, 제대로 된 노동정치, 제대로 된 진보정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난 해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동지가 크레인에 올라가 300일을 넘는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한 시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투쟁을 맡겨두고선 제대로 투쟁을 조직하지도 않았고 위원장으로서 투쟁을 주체적으로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은, 김영훈 위원장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고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노총과 김영훈 위원장은 지금 쌍용자동차 동지들이 22명이나 숨지고 수백명의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 투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투쟁에 제대로 결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총선거간 동안에 민주노총과 김영훈 위원장은 이런 투쟁 현안을 내버려 둔 채 통합진보당 지지에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김영훈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노동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통합진보당을 찍어야 한다고 온 나라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노동을 대변할 정당인지, 진보의 가치를 지닌 정당인지에 대해서 이미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엄청난 게 논란이 있었고,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서 반대여사를 밝혀왔습니다. 실제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배타적 지지를 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고, 국민참여당이나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의 명망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일관되게 노동자를 탄압했고,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은 진보신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던 셈입니다. 민주노동당 10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왜 2008년 분당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통합진보당의 소위 당권파들은 왜 혁신이 불가능한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 소속의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민주노총과 김영훈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대한 논의를 대의원대회에서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통합진보당 지지에 반대하여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서명을 통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정족수가 미달되어 이 대의원대회는 유회되었습니다만, 이 대의원대회를 유회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민주노총과 김영훈 위원장은 반성적인 자세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닥치고 통합진보당’으로 밀어붙인 민주노총과 김영훈 위원장에게 이번 통합진보당의 막장정치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

숨긴 채 통합진보당을 향해서 쇄신하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상과 자긍심을 추락시킨 김영훈 위원장과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 노동자, 민주적인 노동조합에 엄중히 사죄하라!
1.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조직적인 책임은 김영훈 위원장과 민주노총 집행부에 있다는 점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지고 김영훈 위원장과 집행부는 사퇴하라!
1. 민주노총은 국민들에게 진보라는 말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라!

2012년 5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연구노동조합

인터내셔널가



1.깨 어 라 노 동 자 의 군 양 대 굴 레 를 벗 어 던 져 라 정
 2.어 떠 한 높 으 신 은 두 반 고 귀 한 이 념 도 허
 3.억 세 고 못 박 혀 굶 은 두 손 우 리 의 무 기 다 나



의 는 분 화 구 의 불 길 처 럼 힘 차 계 타 온 다 대 지
 공 에 매 인 십 자 가 - 도 우 릴 구 구 원 못 하 네 우 리
 약 한 노 예 의 근 - 성 모 두 쓸 어 버 리 자 무 녀



의 - 저 주 받 은 땅 - 에 새 세 계 를 펼 - 칠 때 어
 것 - 을 되 - 찾 는 는 것 - 은 강 철 등 같 은 우 리 의 손 노
 진 - 폐 - 혀 의 땅 - 에 평 등 의 피 - 울 때 우



떠 한 남 - 은 - 쇠 사 슬 도 우 리 를 막 지 못 해 들
 예 의 최 사 슬 을 끄 어 내 고 해 방 으 로 나 가 자 어
 리 의 불 - 은 - 새 태 양 은 지 평 선 에 떠 온 다 다



라 최 후 결 전 투 쟁 의 외 침 을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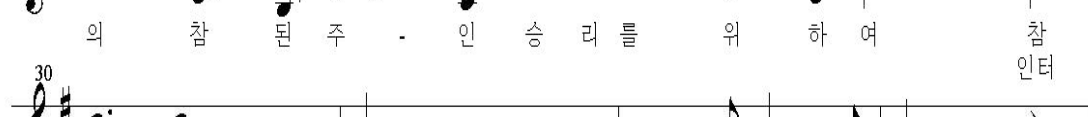
중 이 여 해 방 의 깃 발 아 래 서 자 역 사



의 참 된 주 - 인 승 리 를 위 하 여 참



인터



자 유 평 등 그 길 로 힘 차 계 나 가 자
 내 셔 날 깃 발 아 래 전 진 - 도 전 진

